

KINU 연구총서 10-01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 임강택 · 전성훈 · 황병덕  
신상진 · 임을출 · 차문석 · 최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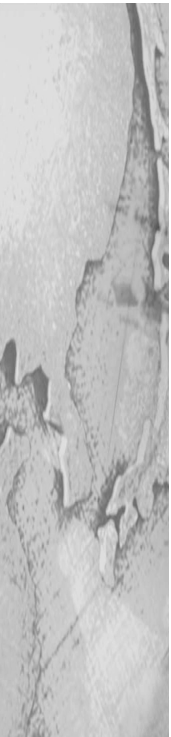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01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 임강택 · 전성훈 · 황병덕  
신상진 · 임을출 · 차문석 · 최 강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583-9 93340

가 격 ₩9,5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	7
1.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 .....	9
2. 핵 보유 고수 정책과 향후 전개 예상 .....	24
III.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이 제기하는 도전 .....	59
1. 북한 내부 영향 .....	61
2. 남북관계 .....	76
3. 안보적 측면 .....	88
4. 국제관계 .....	95
IV. 미국과 중국의 대응과 국제 핵질서의 변화 .....	101
1. 미국의 대응 .....	103
2. 중국의 대응 .....	111
3. 새로운 국제 핵질서와 북한 .....	128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b>V.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b> .....	135
1. 대북정책 측면 .....	137
2. 외교정책 측면 .....	154
3. 안보정책 측면 .....	165
<b>VI. 요약 및 결론</b> .....	183
<b>참고문헌</b> .....	195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203

# 표 목 차

<표 II-1> 핵 억제제의 유형 .....	40
<표 II-2> 평양의 핵 독트린: 현재 대 미래 .....	50



# I. 서론

이  
전  
사  
적  
야  
퍼  
평  
파



북한은 2005년 핵 보유를 선언했고, 국내정책에서도 반시장정책으로 전환을 분명히 했다. 그 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 보유 의지와 함께 핵무기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은 반복하여 핵 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2003년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틀이었던 6자회담은 검증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북한은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해, 2009년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실험과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조치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술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남북한, 미·북 사이에 잠시 협상 국면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북한은 강경한 언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 과시를 위한 협박성 언사를 재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3월 천안함이 공격당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과 대응으로 2010년 5월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북한은 2005년부터 내부적으로 반개혁적이고 강경한 공안 통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부터 개혁적 조치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기 시작했다. 한편 2007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비사검열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7년 10월 이후 시장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8년 8월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 2009년 1월에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며, 2009년 4월 국방위원회가 확대·강화되었다. 2009년에는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치러진 데 연속하여 11월 30일에는 화폐개혁이 시행되었다. 한편 2010

I

II

III

IV

V

VI

년에는 후계체제 구축 진행 동향이 나타났고, 9월 28일에 열린 당대표 자회는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을 공식 무대에 등장시켰다.

이와 같은 여러 정세에서 근본적인 것은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전력을 확대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의 경과가 보여주듯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화된 국제적 고립과 징벌에 노출되어왔고, 앞으로라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강경한 공안 통치와 권력 승계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내부 경제문제와 주민 저항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전반적으로 동북아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서 나타났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국제적 긴장과 북한 급변 가능성을 놓고 남북한 및 중국과 한국과 미국 간에 잠재적 현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상황 진행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가 함축하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황의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새로운 도전과 과제,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적절하게 우리의 전략 구상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글의 Ⅱ장은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Ⅲ장은 이것이 제기하는 도전, Ⅳ장은 미국 및 중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 핵질서의 변화, Ⅴ장은 한국의 대응을 서술한다. Ⅱ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 그리고 예상되는 개발방향을 평가하며,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정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목적과 목표, 그리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서술한다. 여기까지의 서술은 먼저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관련주제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한다. Ⅲ장은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북한 내부, 남북관계, 안보적 측면, 국제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Ⅳ장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어떤 정책입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핵질서가 북한 핵문제에 주는 영향을 서술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Ⅴ장은 대북정책, 외교정책 및 안보정책과 관련한 고려사항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서술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여러 주제에 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했다. 따라서 첫째, 가급적이면 2008년 이후의 새로운 상황 전개에 집중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상황판단과 정책수립과 연계된 사안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서술했다. 셋째, 북한의 핵 보유 고수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연구 여건상 여기서는 보다 핵심적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만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시한은 2010년 11월 31일까지의 상황전개이다.

I

II

III

IV

V

VI



## II.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이  
전  
사  
적  
야  
퍼  
평  
파





여기의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시점, 현존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평가와 외부의 평가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관련국가 및 전문가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먼저 북한 측의 입장을 서술하고, 그 외 관련국의 여러 입장을 서술한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정책의 실태와 향후 전망이다. 핵 보유 정책에 대한 언술 변화 및 핵 증강 및 사용에 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서술한다. 나아가 핵 확산 및 억제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북한의 논리에는 어떤 유형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핵 보유가 북한에게 어떠한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1.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

### 가. 핵무기 개발 실태에 대한 북한 측의 서술

북한 측의 문헌에 따라 핵개발 실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북한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플루토늄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바꾸는 작업을 개시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 억제력 강화에 나선 것은 2003년 이후 중단되지 않은 미국의 핵무기에 기초한 대북 압박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시작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월 10일 북한 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 있던 핵비확산조약 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I
II
III
IV
V
VI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이후 북한은 합법적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전부 무기화하는 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sup>1</sup> 이후 북한 외무성은 핵시설 가동재개, 8,000여 개 폐연료봉 재처리,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및 무기화 등을 언급했다. 북한의 공식 대표가 (비공식적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확인했던 발언은 2003년 4월 23일 이근 외무성 부국장이 당시 미국 6자회담 대표인 켈리 차관보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할 수 없다. 그것들을 실험할 것인지, 수출할 것인지, 증산할지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sup>2</sup> 이후 북한은 2003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연이어 유사한 발언을 했다.<sup>3</sup>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핵문제에 관한 외무성의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자위적 핵억제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했다.<sup>4</sup> 2004년 9월 외무성 최수현 부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포하고 “핵 무기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 5월 11일 외무성은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작업을 완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조선반도와 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북한은 1992년 5월 IAEA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서 손상된 연료봉으로부터 약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IAEA는 수 Kg일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은 10~14Kg으로 판단한다. 백홍중, “북한의 핵 개발능력 및 위협 평가,” 『합참』, 제30호 (합동참모본부, 2007.1) p. 21.

2. 이수혁, 『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 (서울: 중앙Books, 2005), p. 309.

3. 위의 책, p. 310.

4. “<6자구도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 『조선신보』, 2009년 4월 2일.

료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거행했다. 북한은 2007~2008년 일련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6월 26일 북한은 그간의 핵 활동에 대해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그중 2kg을 2006년 핵실험에 사용했다는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sup>5</sup> 2008년 8월 13일 외무성은 불능화 중단을 발표하고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고려한다고 경고했다. 2009년 4월 29일 북한은 자체의 경수로발전건설(즉 우라늄 농축)을 적극 검토할 것, 그리고 핵시설 원상복구와 정상가동, 폐연료봉 처리 등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sup>6</sup> 북한은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거행했다. 이어 북한은 6월 13일 폐연료봉 재처리에 따른 새로운 플루토늄 전량의 무기화,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를 선언했다.<sup>7</sup>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9월에는 폐연료봉처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sup>5</sup>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www.armscontrol.org> (검색일: 2010.8.25); 37kg을 신고했다는 견해도 있다.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ongressional Reserach Report* (May 26, 2009), p. 5; 예영준, “북핵신고 의미와 과제,” 『중앙일보』, 2008년 6월 27일; 셸리그 해리슨은 북한이 30.8kg을 신고했으며 모두 무기화했다고 북한 측이 말했다고 한다. 유강문, “북, 비핵화 신고 플루토늄 모두 무기화,” 『한겨레』, 2009년 1월 18일.

<sup>6</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

<sup>7</sup> 조선신보의 한 기사는 우라늄 농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조선의 핵무기는 령변 핵시설에서 나온 플루토니움을 원료로 만든 것이다. 조선의 국산경수로건설은 종래의 비핵화협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해도 조선이 우라늄농축 기술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또다시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농축우라늄도 핵무기의 원료로 될 수 있다”, “조미핵대결, 3라운드 진입의 위협성,” 『조선신보』, 2010년 4월 9일.

I
II
III
IV
V
VI

들어섰다는 것을 밝혔다.<sup>8</sup> 조선중앙통신은 11월 3일 지난 8월 폐연료 봉 8,000개의 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sup>9</sup> 2009년과 2010년 북한은 반복하여 한·미의 각종 ‘군사적 도발과 제재 압박’을 거론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010년 4월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이고 현대화하게 될 것”을 선언했다.<sup>10</sup> 북한은 5월 12일 핵융합반응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6월 북한은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향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sup>11</sup> “핵 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sup>12</sup>을 천명했다.

북한은 2010년 10월 말 이후 공세적인 핵 동향을 전개했다. 10월말 이후 북한은 풍계리 일대에서 지하핵실험 갱도 굴착 등 3차 핵실험 준비 동태를 노출시켰다.<sup>13</sup> 나아가 2010년 11월 12일 초청한 미국의 핵커(Hecker) 박사 일행에게 경수로 건설현장과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는 파일럿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sup>14</sup>

8-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발송, 『조선중앙통신』, 2009년 9월 4일.

9- 김정은, “북,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완료,’” 『서울신문』, 2009년 11월 4일.

10-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핵테세검토보고서’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9일.

11- 북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8일.

12- 북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24일.

13- 이하원, “[북한 또 핵실험 준비 왜?] ‘核실험까지 3개월’ 시한 정해놓고 “그 전에 대화 나와라” 미국압박,” 『조선일보』, 2010년 10월 27일; “정부, 北 ‘100MW 경수로, 핵실험’ 주시,” 『연합뉴스』, 2010년 11월 17일; 신석호·윤완준·장택동, “연평도에 관심 쏠리는 사이 ... 더 심각해진 북핵,” 『동아일보』, 2010년 12월 7일.

14-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 나. 핵무기 개발 시점과 경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점과 현존하는 핵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핵무기 개발의 시점과 과정에 관해 북한 측과 다른 주장을 본다. 다음으로 북한의 현존 핵 능력을 평가한다. 이에선 플루토늄 추출량, 핵무기 보유 개수, 고농축 우라늄 생산능력, 핵무기 운반 수단,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및 핵융합 반응을 활용한 강화형 핵무기 개발 능력이 포함된다.

먼저 핵무기 개발 시점과 과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공식 주장보다 훨씬 일찍부터 국제적 협력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북한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구 소련의 KGB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원자력 연구소에서 최초의 핵 장치를 완성했지만, 실험은 하지 않기로 북한정부가 결정했다고 평가했다.<sup>15</sup>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 Leon LaPorte는 2006년 4월 인터뷰에서,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이전에 3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sup>16</sup>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A.Q. Khan은 1999년 평양인근의 시설에서 3기의 핵 장치를 관람했다고 증언했다.<sup>17</sup> 이밖에 여러 탈북자의 증언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

<sup>15</sup>- *Argumenty I Fakty*, Mar. 10. 1992; *Izvestiya*, Jun. 24, 1994. 재인용;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 5, 2010), p. 27.

<sup>16</sup>- Kang Chan-ho, "Former USFK commander: transfer of wartime control should not be carried out overnight," *Joong Ang Ilbo*, Apr. 3, 2006. p. 13. Niksch, *Ibid.*, 재인용.

<sup>17</sup>- David E. Sanger, "Pakistani says he saw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The New York Times*, Apr. 13, 2004.

황장엽은 1993년 핵 사찰 문제가 나오기 전에 김정일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sup>18</sup>

둘째, 핵 물질 및 무기의 개발과 생산에서 상당한 국제적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1990년대 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과 핵무기 생산부품을 수입했을 것으로 보았다.<sup>19</sup> 러시아 정보기관을 인용한 1993년의 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56kg의 플루토늄(7~9개의 핵폭탄 상당)을 러시아로부터 밀수했다.<sup>20</sup>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서 협력해왔다. 이란은 북한의 핵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은 이란의 노동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미사일탑재 핵탄두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sup>21</sup>

셋째, 우라늄 농축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2009년에 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히 파키스탄과 1990년대 중후반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sup>22</sup> 미국 정보기관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sup>23</sup> 그 핵심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의 고농축우라늄 기술 및 시설의 교환이었다.

---

18. 문성규, “황장엽, ‘북 핵무기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 『연합뉴스』, 2006년 10월 12일.

19.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20. Stern, March, 1993(독일잡지); Niksch, *Ibid.*, 재인용.

21. Niksch, *Ibid.*, pp. 21~25.

22. 이수혁, 『전환적 사진: 북핵 문제 정밀분석』, pp. 262~274.

23. Niksch, *Ibid.*, pp. 17~19.

## 다. 북한의 현존 핵무기 능력

다음으로 북한의 현존 핵무기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의 개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군의 견해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지만,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5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1, 2차 핵 실험 시 수 kg을 사용해 현재 40여 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고 한다. 다음은 셸리그 헤리슨이 전하는 북한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 측은 플루토늄 30.8kg을 추출했고 이를 전량 무기화했다.<sup>25</sup> 서방측의 일반적 견해는 (2009년 8,000개 재처리 결과(최대 약 7kg)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30kg에서 5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것이다.<sup>26</sup>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가장 보수적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추출한 총 플루토늄의 양은 40.5~63.5kg 정도이다. 이 중에서 두 차례의 핵실험에 사용된 5~8kg을 제외하면, 현존 보유량은 32.5~58.5kg이다.<sup>27</sup>

<sup>24</sup> 김남권·한민구, “대통령에게 국방비 7% 증액 건의할 것,” 『연합뉴스』, 2010년 6월 30일; 국방부가 출간한 『국방백서 2006』은 1994년 북·미기분합의 이전에 10~14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2003년과 2005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판단한다. p. 24; *Defense White Paper 2008*은 북한이 약 4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본다. p. 37. 이것은 북한이 2009년 폐연료봉 처리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sup>25</sup> 유강문, “북, 비핵화 신고 플루토늄 모두 무기화,” 『한겨레』, 2009년 1월 18일.

<sup>26</sup>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Report* (May 26, 2009), p. 5.

<sup>27</sup>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p. 32.

북한은 1, 2차 핵실험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두 핵 실험 모두 소규모로 시행되었다. 두 번째 핵실험 규모는 2~4kt이었다. 이는 북한이 처음부터 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개발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sup>28</sup> 또는 북한이 플루토늄 사용량을 절약하고, 핵무기 개수를 늘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로써 가치 있는 저 위력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sup>29</sup>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의 문제이다. 북한이 보유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냐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는 북한의 기술력, 탄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평가는 핵무기 한 개당 사용되는 플루토늄은 1940~1950년대에는 6kg, 최근에는 4kg으로 평가된다.<sup>30</sup>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군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는데,<sup>31</sup> 현존 플루토늄 보유량을 40kg으로 보면, 핵무

28. Zhang Hui, “Revisit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China Security*, Vol. 3, No. 3 (Summer 2007), pp. 119~130.

29. 문주현,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능력,”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30. <[www.armscontrolwonk.com/709/how-much-pu-in-a-north-korean-bomb](http://www.armscontrolwonk.com/709/how-much-pu-in-a-north-korean-bomb)> (검색일: 2008년 5월 22일); 황주호·문주현,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여름호 (한국국방연구원, 2008), p. 16 재인용.

31.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6월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자료에는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운반수단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즉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플루토늄 7~8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50kg이면 6~7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한국)군은 북한이 러시아산 IL(일류신)-28 폭격기를 이용해 핵무기를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으며 의주, 장진기지에 IL-28 폭격기 82대가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김귀근, “탄도미사일 탑재 위해 소형화 진행중,” 『연합뉴스』, 2006년 6월 26일.



기 6~10개가 된다. 한국군이 핵무기보유 인정에 주저하는 것과는 달리, 2008년과 2009년 초 미국 국방부와 정보위 보고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간주했다.<sup>32</sup> 2009년 12월 게이즈 장관은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했다.<sup>33</sup>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10년 4월 “(북한은) 1~6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sup>34</sup>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1개에서 12개 가량의 핵 장치 또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sup>35</sup> 최근 대부분의 추론은 북한이 30~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 폭탄 한 개당 5~6kg을 소요한다고 하면, 5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sup>36</sup>는 것이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북한의 핵폭탄은 3~4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며, 북한이 38.5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다고 할 때, 6개에서 12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sup>37</sup> (단 이상의 평가는 2009년 8,000개 재처리 결과

<sup>32</sup>- James Schlesinger,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 (Sep. 2008), p. 11;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수단을 획득했다고 한다. United States Joint Force Command, *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 p. 32; 아시아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러시아의 다섯 개의 핵 국가가 존재한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보부가 2008년 11월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표기했다. “美보고서, ‘핵무기보유국’에 북한 또 포함,” 『연합뉴스』, 2009년 1월 13일.

<sup>33</sup>- Robert Gates, “A Balanc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88, No. 1 (January/February 2009).

<sup>34</sup>- 조찬제, 클린턴 “북한 핵무기 1~6기 보유,” 『경향신문』, 2010년 4월 11일.

<sup>35</sup>- Andrew Scobell and John M.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pr. 2007), p. 77.

<sup>36</sup>-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p. 5.

<sup>37</sup>-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ia Report*, No. 168 (Jun. 18, 2009), p. 11.

I
II
III
IV
V
VI

(최대 약 7Kg)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북한이 공언하는 것처럼 ‘전량 무기화’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거나, 플루토늄 보유량으로부터 곧바로 보유 핵무기 개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핵무기로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루토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춘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량과 부피가 크고 발사수단과 정확도, 방어 돌파능력이 부족해 전술적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각종 부품과 재료, 기술 부족으로 신뢰성과 재현성, 유지보수 능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성에 변화가 생기며 용접 부위는 쉽게 부식되고, 고성능 폭약도 취약해진다. 중성자 발생 장치도 최선의 상태로 상시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sup>38</sup>

셋째, 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보자.<sup>39</sup> 우라늄에는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 두 가지는 동일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다. 저농축우라늄은 경수로 발전기의 원료로 사용된다. 생산된 저농축우라늄의 농축활동을 반복하면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고, 이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된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플루토늄 생산의 활로가 막히자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농축 프로그램을 본격화했다. 다른 나라 농축 사례를 보면, 보통 최초 농축 프로그램 착수

---

<sup>38</sup> 이춘근, “북한 핵무기 및 로켓의 기술적 조명과 전망,” p. 6.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1975](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1975)> (검색일: 2010.9.10).

<sup>39</sup> 전성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그 의미와 교훈,” *Online Series Co* 10-42, (2010.11.22); 함형필, 『김정일 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이춘근·김종선,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STEPI Insight*』, 제2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참조.

후 평균 8~10년 지나서야 최초 파일럿 시설을 가동했다. 농축 프로그램 착수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아 1998년으로 가정하면, 2008년경에는 파일럿 시설을 가동할 능력이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다.<sup>40</sup> 공장규모의 생산시설 가동은 최초 파일럿 시설 가동 이후 약 5~7년이 소요된다. 2008년 Siegfried Hecker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실험과 개발 노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공장 규모로 생산을 진전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sup>41</sup> 우라늄 농축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수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sup>42</sup>

북한은 2010년 11월 12일 경수로 건설 현장과 공장규모의(industrial)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다.<sup>43</sup> 북한은 2012년을 완공 목표로 25~30 MWe 용량의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농축시설은 ‘초현대식 통제시설’과 2,000개의 원심 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설을 완전 가동하면 연간 2t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소형 경수로의 연료로 충분하다. 그런데 동일한 시설과 기술이 고농축우라늄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이 설비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연간 40Kg의 90% 순도의 핵폭탄용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는 1~2개의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

40-북한의 농축우라늄 능력과 관련한 여러 평가와 논쟁은 이수혁, 『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분석』, pp. 259~294; 황일도, “2002년 북한 HEU 의혹은 미 네오콘의 정보조작?,” 『신동아』, 50권 5호 (2007.5), pp. 322~333.

41-Siegfried Hecker, “Denuclearizing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y/June 2008);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p. 9.

42- 편집실, “북한, 농축우라늄과 핵확산 지속?,” 『통일한국』, 5월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p. 30.

43-Hecker, *Ibid.*

I
II
III
IV
V
VI

데 충분한 양이다.

이 정도 수준의 농축우라늄 설비와 기술을 달성한 것을 보면, 북한은 수십 년의 연구개발과 재료 구매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공개된 시설 이외에도 다른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공개된 시설도 추가로 확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저농축우라늄 생산은 경수로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언제든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다량의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한다면,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소형 핵무기를 쉽게 생산해 낼 수 있게 된다. 만약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평화적 목적(경수로 이용)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핵화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것이다.<sup>44</sup>

넷째, 핵무기의 운반수단을 보자. 이론적으로 북한은 실제 사용을 위해 핵무기를 운반하자면, 비행기, 배 또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취약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문제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은 애초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sup>45</sup> 미국방성의 한 보고서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수단을 획득했다고 판단한다.<sup>46</sup> *International Crisis*

---

<sup>44</sup>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권리는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될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핵에너지를 개발 이용은 세계적 추세,”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30일.

<sup>45</sup> 편집실, “북한, 농축우라늄과 핵확산 지속?” p. 30.

<sup>46</sup> James Schlesinger의 주관하에 작성된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 p. 11.

Grou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북부지역에 배치했다고 한다.<sup>47</sup> 그러나 아태안보문제담당 미 국방차관은 2010년 9월 상원 청문회에서 아직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즉 “(북한이) 만약 핵무기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한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현재도 이미 높은 수준인) 위협을 한층 더 높이는 위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sup>48</sup>

이에 비해 한국 측의 공식 평가는 보수적이다. 한국군의 한 평가는 2007년 초, “현 시점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투발 수단은 항공기이며, 북한이 보유한 항공기의 폭탄 탑재량 및 성능,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인 IL-28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49</sup> 아울러 2010년 초 국정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행기에 실어 투하할 수 있는 재래식 핵무기 1~2개를 개발했을 수는 있지만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sup>50</sup> 그러나 한국에서도 일부에서는 소형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1</sup> 일반적으로

<sup>47</sup>-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ia Report*, No. 168 (18 Jun. 2009), pp. 10~11.

<sup>48</sup>- Statement for the Record by Wallace “Chip” Gregson, Assistance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Pacific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Submitted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ep. 16, 2010).

<sup>49</sup>- 백홍중, “북한의 핵 개발능력 및 위협 평가,” p. 22.

<sup>50</sup>- 김귀근, “北핵무기 소형화기술 미확보 속단 못해,” 『연합뉴스』, 2005년 2월 15일.

I
II
III
IV
V
VI

보면, 현지점에서도 핵물질을 다량(플루토늄 10Kg, 고농축우라늄 60Kg)이상을 사용하면 탄두 소형화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보유 핵물질이 소량(플루토늄 40Kg 가량)이기 때문에, 핵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형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탄두의 소형화와 폭발력의 소형화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라. 향후 핵무기 개발 추진 방향

북한은 2010년 들어 ‘새롭게 발전된 방향’<sup>52</sup> 그리고 ‘핵억제력을 다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향’<sup>53</sup>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 핵무기이고 그 다른 하나는 핵융합 반응을 활용한 강화형 핵무기이다. 핵무기를 ‘다각적으로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통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sup>54</sup> 첫째, 북한은 영변 원자로 등 생산시설 노후화로 추가로 플루토늄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새로운 시설을 건설한다면, 고농축

---

51. 유용원·최경운, “북(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을 가능성,” 『조선일보』, 2009년 6월 16일; 소형화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여러 논쟁점에 대해 황일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 『신동아』, 50권 5호 (2007.5), pp. 278~287.

52. 북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8일.

53. 북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답변,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24일.

54. 황주호·문주현,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 p. 16.

시설이 플루토늄 생산시설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농축우라늄은 연속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공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용이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둘째, 플루토늄 생산시설은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우나 고농축 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은폐가 용이하다. 셋째, 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에 비해 취급이 용이하고 핵무기 제작이 쉽다. 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핵무기(기폭장치)제조가 용이하며 소형경량화에도 유리하여 야포·단거리 미사일 등 전술 핵무기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핵폭발 위력의 증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강화형 핵무기 제작이다.<sup>55</sup> 북한은 5월 12일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융합은 ‘실험실 수준의 핵융합 반응’ 실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의 폭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강화형 핵무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통해 미사일 탑재 능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술핵무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팻맨(나가사키에 투하된 최초의 핵무기) 수준의 초보적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은 있으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sup>56</sup> 따라서 북한 핵무기 개발의 현행 목표는 소형경량화를 통해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 노력의 방향일

<sup>55</sup> 이성주, “북한의 핵 융합 미스터리,” 이성주기자의 북핵리포트 <[blog.naver.com/eye4all](http://blog.naver.com/eye4all)> (2010.6.24).

<sup>56</sup> 문주현, “북한, 저위력·소형 핵무기 만들수도,” 『통일한국』, 제27권 5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p. 31.

I
II
III
IV
V
VI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트기술능력이 개선되고 핵물질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핵무기의 개수를 늘리는 한편, 전술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1, 2차 핵실험은 공히 소규모였고, 따라서 애초부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경량 핵무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 황주호와 문주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sup>57</sup>

통상 핵무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핵개발 초기단계에서 핵무기의 목적은 전략적 용도로 국한된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핵무기의 일부를 전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는 주로 국지전에 사용되는 폭발력이 수 킬로톤(kt)의 작은 핵무기로 지대공 미사일·공대공 미사일·핵 지뢰 등에 장착된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량이 10개 이상이 되면 핵무기의 일부를 전술적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전쟁 발발 시 5개 전후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미, 대일, 대남 위협용 전략무기로 비축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 2. 핵 보유 고수 정책과 향후 전개 예상

여기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언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최근 핵 증강 및 사용에 관한 위협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이다. 둘째,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핵 무장 및 사용의 논리를 확산 및 억제의 세 가지 국제적 유형에 비추어 평가한다. 셋째, 핵 보유가 북한에게 어떠한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효용을 가지

---

<sup>57</sup> 황주호·문주현,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 p. 17.



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가. 북한의 논리

### (1) 핵 보유 정책의 언술 변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정책 입장은 시기에 따라 전술적으로 변화해 왔다. 2009년 초 이후의 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바마 정부 출범 전후 북한 문헌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 군대가 특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58</sup> 즉 미국에서 <변혁>을 주창하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북한의 군대는 적대국(미국)의 대화 자세가 자기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반도를 시야에 넣은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이 이미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로 노선을 전환했다는 것을 실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핵문제는 외교당국이 다루었으나, 이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군대의 입장을 밝히는 등 핵문제를 군대가 적극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이다.<sup>59</sup> 또한 한국의 보수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결노선의 본질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압하려 한다는 군사의 관점에서 보고, 대남조치도 군대가 전면에서 나서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0</sup> 군대는 애초부터 6자회담에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특히

58.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 『조선신보』, 2009년 2월 5일; “대화  
와 전쟁은 양립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2월 3일.

59.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한 외교공세,” 『조선신보』, 2009년 2월 5일;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그 어떤 제재,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의 정의의  
대응을 유발시킬 것,”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8일.

60.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 『조선신보』, 2009년 2월 14일.

2009년 4월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국방을 책임진 군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해 나갈 것이라 했다.<sup>61</sup>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2009년 1월 북한은 비핵화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보면,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내용 그리고 비핵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나타난다. 북한은 9.19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sup>62</sup> 또는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라고 했다. 다시 말해 미·북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 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북한의 핵 보유 지위는 추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63</sup> 6자회담의 6자는 ‘조선반도의 북부가 아니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남조선에서의 핵무기 생산과 반입, 그 배비와 이용,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핵 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하고 있는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라는 것이다.<sup>64</sup> 또한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불사용담보를 하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을 공약했다는 것이다.<sup>65</sup> 또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한반도 전

---

61. “<6자구도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 『조선신보』, 2009년 4월 2일.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년 1월 30일.

63. “외무성대변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문제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7일.

64. “북, 총참모부 대변인, 이 대통령 비난 증통기자와 회견,” 『중앙방송』, 2009년 2월 2일.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담화, 2009년 1월 30일.

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 진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 북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sup>66</sup> 즉 ‘미국의 핵 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남핵 폐기가 없는 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북핵 폐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 했다.<sup>67</sup>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오바마 정부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68</sup> 첫째는,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를 통해 단걸음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추인하는 대가로 현재의 군사대결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 폐하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 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sup>69</sup>

그런데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위성)발사를 문제시 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으로 하여 그간 추진해오던 6자회담에 기초한 비핵화 과정이 파탄되었다고 간주한다.<sup>70</sup>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낸 것을 두고, 9.19 공동성명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6자회담에 불참할 것이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66- 위의 글.

67- “북, 총참모부 대변인, 이 대통령 비난 중통기자와 회견,” 『중앙방송』, 2009년 2월 2일.

68- “조미 <변혁> 관건은 동시행동, 오바마정권의 <비핵화> 과제,” 『조선신보』, 2009년 1월 20일; “<6자구로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 『조선신보』, 2009년 4월 2일.

69- “북 총참모부 대변인, 이 대통령 비난 중통기자와 회견,” 『중앙방송』, 2009년 2월 2일.

70- “<6자구로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 『조선신보』, 2009년 4월 2일.

I
II
III
IV
V
VI

나갈 것을 천명했다.<sup>71</sup> 북한은 안보리 성명을 미국이 조작해 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6월 유엔안보리가 결의 1874를 의결하자, 북한은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 작업 개시, 봉쇄는 전쟁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sup>72</sup> 또한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sup>73</sup> 7월에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고 했다.<sup>74</sup>

북한은 8월 이후부터 비핵화입장, 6자회담 재개에 관해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비핵화를 우선시했다면, 이후부터는 비핵화보다는 평화체제 수립을 앞세우고 있다. 북한은 9월에는 “우리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에 난폭하게 이용되는 6자회담에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sup>75</sup> 그리고 10월에는,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며 공화국의 변함없는 목표”라 말했다. 아울러 “조선반도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종식과 핵위협 제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하면서,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될려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6</sup> 또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년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09년 4월 14일.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09년 6월 13일.

73. 위의 글.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담화, 2009년 7월 27일.

75.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보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 2009년 9월 4일.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09년 4월 14일;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14일.

한 10월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에게 북한의 김영일 총리는 “조선반도비핵화는 전조선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다”<sup>77</sup>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비된 핵무기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sup>78</sup>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은 양자회담을 통해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꾸며, 미북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했다.<sup>79</sup> 12월 보즈워스의 평양방문과 관련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측과 공동인식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sup>80</sup> 그러면서 “조미 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확신이 없이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나가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sup>81</sup> 북한은 2010년 초 비핵화에 앞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 번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식으로 요구했다. 2009년 말 6자회담 재개에 관하여 관련국 사이에 협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평화협정회담 제안이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조성된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비핵화과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sup>82</sup>

그런데 6자회담은 단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한다는

77. 김영일 총리가 2009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에게 밝힌 입장, “<조미 다음에 다자>, 합리적인 대화방식,” 『조선신보』, 2009년 10월 21일.

78. 위의 글.

79. “조미양자회담, 시원은 8월의 평양상봉,” 『조선신보』, 2009년 11월 17일; “교전국들간의 직담판, 주제는 <평화>,” 『조선신보』, 2009년 12월 5일.

80. “조미대화, 합리적인 해결방도 찾기,” 『조선신보』, 2009년 12월 11일.

81. 위의 글.

82. “<60년째 종전 조선의 평화협정제안 -중-> 6자구도 근원적 문제해결로 선순환,” 『조선신보』, 2010년 1월 27일.

I
II
III
IV
V
VI

것이다.<sup>83</sup> 북한 측 문헌을 종합하면, 북한의 ‘조선반도비핵화’ 정책은 2009년도 후반기를 거치면서 달라졌다. 북한지도부는 미·북관계의 전과정 그리고 6년간의 6자회담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기초하여 정책을 바꾸었다고 한다.<sup>84</sup> 즉 6년(2004~2009년)간 견지했던 <선비핵화·후평화협정 단계론>을 <평화협정체결 선행론>으로 정책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두 정책의 내용과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미국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을 선행시키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였다고 한다.<sup>85</sup> 특히 9.19 공동성명 이행은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이라는 단계론에 입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우선 영변 핵 시설 등 ‘현존 핵계획’의 포기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핵무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뒤에 미룬다. 둘째, 비핵화공약이행과 북·미 신뢰조성이 맞물려야 하며, 북·미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조치를 취한다. 셋째, 비핵화 문제를 초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신뢰를 쌓고 평화협정체결 환경을 마련한다. 이러한 조치로 9.19 공동성명이행의 초기단계조치가 이행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대표도 참가하는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넷째, 2.13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논의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면 당연히 근본문제, 평화협정체결문제도 논의한다.

북한은 2009년 중후반기 이후,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시

83. 위의 글.

84. “<문제해결의 열쇠는 평화협정에 의한 신뢰조성> 조미관계 전과정에 대한 총화, 도달한 결론,” 『조선신보』, 2010년 1월 25일.

85. 위의 글;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조선이 마음 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 『조선신보』, 2010년 2월 2일.

하게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조치를 거치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고자 했던 과거 6자회담의 방식(2004~2009)은 끝났다고 한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과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문제가 풀릴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sup>86</sup> 북한은 조미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한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비핵화를 위한 행동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즉 ‘비핵화를 통한 신뢰조성’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미 신뢰조성’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을 통해 근원적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비핵화과정이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87</sup> 또한 핵시설 가동 중단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 문제까지 논하려면 미·북 교전관계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군대의 논리도 반영한 비핵화 과정의 새출발이라 했다.<sup>88</sup> 다만 평화회담 형식은 미국이 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sup>89</sup> 아울러 북한은 평등에 기초한 회담운영(다시 말해 제재해제)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올바른 행동순서의 보장을 요구했다.<sup>90</sup> 또한 정전협정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 협상탁자에 나와

86. “주러 북대사, 북 외무성 성명 발표 관련 기자회견 진행,” 『조선중앙방송』, 2010년 1월 15일.

87.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0년 1월 18일.

88. “<60년째 종전 조선의 평화협정제안 -중-> 6자구도 근원적 문제해결로 선순환,” 『조선신보』, 2010년 1월 27일.

89. “<평화협정형식결정을 미국에 요청>, 중국, 러시아 주재다사가 회견,” 『조선신보』, 2010년 1월 15일.

90.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조선이 마음 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 『조선신보』, 2010년 2월 2일.

았지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이 마련된다는 것, 현시점에서 협정체결이라는 종착점을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라 했다.

한편 7월 북한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된 직후,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적대세력이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어 달린다면,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한 충돌확대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sup>91</sup>

## (2) 핵 증강 및 사용 위협 논리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효용은 실제사용 보다는 사용위협을 통해 획득된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상호적 취약성 때문에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승리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핵무기 사용전략에서는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 공격과 방어 보다는 사용위협을 통한 억제가 현저한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억제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 수준의 징벌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그러한 공격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실제 사용)위협의 신뢰성은 실제 핵 능력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과 의도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유사시 실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상대방이 믿게 만들어야 억제가 실효성을 획득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

<sup>91</sup> “북 외무성 대변인, 7.10 유엔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관련 중통기자 질문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10일.



중요하다. 첫째, ‘의지 천명의 기술(art of commitment)’이다. 둘째, ‘위험의 조작(manipulation of risk)’이다.<sup>92</sup>

이와 같은 핵무기 사용위협과 핵 억제제의 일반성은 북한의 핵 증강 및 사용위협 논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보유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함과 아울러 유사시 실제로 핵이 사용될 것을 민도록 만들기 위한 ‘의지 천명’과 ‘위험 조작’을 하고 있다. 최근 핵무기 사용에 관한 북한당국의 가장 원칙적 언명은 2010년 4월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에 제시되어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핵 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핵이 방어적 억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구체적 사례가 나열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반도 전쟁방지:

공화국의 핵 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다.<sup>93</sup>

#### 방어와 공격의 수단:

---

<sup>92</sup> 이상의 내용은 Muthiah Alagappa,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Muthiah Alagappa (ed.),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80~81.

<sup>93</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조선반도와 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I
II
III
IV
V
VI

인민의 자유와 행복, 정의를 위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으로 될 것이다.<sup>94</sup> 우리나라가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된 이상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sup>95</sup>

이와 같은 핵 억제력의 효용은 것은 ‘남조선’과 ‘민족’에게도 유용한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 남조선을 위한 핵 우산:

지금껏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해온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로 되지만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전쟁위험을 막아주고 안전을 지키는 철의 방패로 되고 있다. 우리의 선군덕이 있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남조선도 핵참화를 면할 수 있었다.<sup>96</sup>

#### 민족을 위한 핵우산:

우리의 핵무기보유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위협압박하고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철두철미 자위적이며 평화수호적인 성격과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철두철미 자위적인 것으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우리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sup>97</sup>

---

94. “우리의 핵시험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9일.

95. “전쟁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22일.

96.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핵 도박놀음,”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5일.

97.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위기 사태를 조성한 장본인이다,”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핵 위협과 선제공격을 획책하는 것이 북한을 핵 보유로 떠밀고 있으며, 이에 맞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무단히 침략하는 것 또는 선제공격을 가장 우려스러운 안보 유사로 상정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sup>98</sup> 이러한 것이 최근에 핵위협 및 핵 선제공격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설정:

미국은 북한을 핵공격 대상으로 찍어놓고 핵 위협을 계속 하고 있다.<sup>99</sup> 북한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특히 미국에서 부시행정부의 출현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부시행정부는 우리를 악의 축이라 지칭하고 우리를 핵 선제타격 명단에 올려놓았다. 또한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 핵공격능력을 완성시켜나갔다.<sup>100</sup> 2010년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을 발표하면서 조선을 핵무기 불사용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sup>101</sup>

2009년 6월 28일.

<sup>98</sup>- Victor D.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 (2002), p. 210.

<sup>99</sup>- "핵 숨바꼭질을 그만두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31일.

<sup>100</sup>- "핵우산" 제공은 노골적인 북침핵전쟁 공약이다," 『민주조선』, 2009년 6월 30일.

<sup>101</sup>- 북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 주장,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8일.

## 확장억제는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

미국의 군사교리는 선제공격의 전쟁교리이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복침전쟁각본은 <확장억제력> 제공에 의한 핵전쟁 각본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이 조선반도 <유사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에는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에게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쫓아 박은 <확장억제력> 제공에 관한 문서까지 만들었다.<sup>102</sup>

##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조작하여 핵전쟁을 합법화:

지금 괴뢰들이 <핵, 미사일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벌려 놓고 있는 무력증강소동이 그 무슨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을 강화하며 그에 의거하여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sup>103</sup> 미국은 그 누구의 있지 않은 <위협>을 구실로 임의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합법적으로 치르려 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북한은 핵시험을 단행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여왔다.<sup>104</sup>

##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핵 선제공격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핵전쟁연습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성

---

102-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17일; “핵전쟁을 노린 범죄적인 청탁놀음,”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14일.

103- “핵전쟁도발을 위한 무모한 무력증강책동,”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7일.

104- “전쟁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22일.

격자체가 핵전쟁연습, 북침전쟁연습으로 락인된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sup>105</sup>

천안함 침몰 사건은 대북 핵압살 책동: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걸고 반공화국 핵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언제 어느 시각에 미제의 핵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 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sup>106</sup>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sup>107</sup>

이상을 종합하여 핵무기 사용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북한은 핵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과 공격’을 가해오는 주체는 미국과 한국으로 상정되어 있고, 또한 핵 공격과 핵에 의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밝혔던 ‘핵무기 선

105.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7일; “비핵화를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소동,”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2일; “북침을 노린 핵 전쟁 불장난,”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1일.

106. “핵억제력 강화는 천만번 정당하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5일.

107.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 식의 강위력한 억제행동으로 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을 짓부셔 버릴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24일.

제 불사용' 원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비공격 용도로 핵무기 사용'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은 적대국의 핵 또는 재래식 공격의 목표가 되었을 때만 또는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낄 때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다는 것이다.<sup>108</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침략과 공격'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협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에 대응하여 핵을 사용한 것이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대북 핵공격은 '선제불용'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보복공격 전용이다.<sup>109</sup>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장치로 간주하고 있는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가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는 한국 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공격 용도로 핵무기' 사용은 핵 선제 사용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재래식으로 공격하여 정권에 주요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이 자신의 재래식 전력으로 그러한 공격을 억제하거나 물리칠 수 없는 경우 '침략과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핵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sup>108</sup>- Scobell and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 96.

<sup>109</sup>- 황일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 pp. 180~188.

## 나. 북한 핵 억제론과 향후 전개 예상

여기서의 핵심 질문은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위계의 핵 억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 간 대량 핵 균형에 기초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을 통한 억제이다. 둘째, 영국, 프랑스, 중국과 같은 국가의 최소 핵 억제(minimum deterrence)이다. 셋째, 중소 지역 국가의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existential deterrence)이다. 이 세 가지 억제유형은 공히 공격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치명적 손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징벌 위협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 차이는 억제에 필요한 보복 능력(과 핵무기고의 규모), (보복이 실제 발생할) 확실성의 수준, 억제해야 할 위협의 성격 또는 대처되어야 하는 유사성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sup>110</sup>

2005년 핵보유 선언, 2006년과 2009년의 1, 2차 핵실험을 경과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능력을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로부터 최소 핵 억제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핵 억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경우를 살펴본다.

### (1) 확산 및 억제의 세 가지 유형

먼저 세 가지 핵 억제 개념이다(<표 II-1> 참조).<sup>111</sup> 첫째, 미

<sup>110</sup>- Alagappa,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p. 88.

국과 소련과 같은 초 강대국 간 확증보복을 통한 억제이다. 확증보복은 어떠한 공격자에게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항시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의도된 핵 공격을 억제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해당 국가는 대량 핵 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대량 핵 보복이 가능한 수준의 핵 군비를 갖추고자 한다. 이러자면 대규모의 핵무기고가 필요하며, 지상, 공중, 해상에서 핵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핵전력에 대한 보호능력, 세련된 지휘, 통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아울러 정보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표 II-1 핵 억제의 유형

확산자	확산 유형	주요 적대상대	억제 유형
초강대국	공표	상호	확증보복
중견 국가	공표	초강대국	최소억제
중소국가	모호	적대적 이웃국가	모호성에 의한 억제

둘째, 최소 핵 억제(minimum deterrence)이다. 이는 소규모의 핵전력으로도 핵공격 또는 전면적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해있다. 최소억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핵무기

<sup>111</sup> 세 가지 억제 개념은 다음 글을 참조. Devin T. Hagerty, "The Power of Suggestion: Opaque Proliferation, Existential Deterrence, and the South Asian Nuclear Arms Competition," *Security Studies*, Vol. 2, No. 3 (1993), p. 3; Alagappa, *Ibid.*, pp. 88~91; Muthiah Alagappa,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Security: Far-Reaching Influence and Deterrence Dominance," Alagappa (ed.),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pp. 496~500.



가 핵 보복 용도나 재래식 전쟁의 확전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몇 개 안되는 핵무기로도 (도시와 같은 가치 자산에 대한 공격을 통해) 고도의 절대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핵 억제는 영국, 프랑스, 중국과 같은 국가, 그리고 1998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과 비교할 때 이들 국가가 갖출 수 있는 핵 능력은 애초부터 왜소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핵 군비는 최소보복능력을 지향했다. 즉 핵 능력이 훨씬 강력한 국가가 핵공격을 가하더라도 모든 핵무기를 파괴했는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수준, 따라서 핵 공격을 하는 경우 핵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핵 군비를 갖추는 것이다. 최소억제의 핵심은 핵공격과 재래식 전면공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강제(compellence), 강압외교, 외교적 전략적 정책 자율성의 제고와 관련해서도 제한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sup>112</sup>

셋째,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existential deterrence)이다. 이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자신의 핵 능력을 부정한다. 1998년 이전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2003년 또는 2005년 이전의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라의 특징은 핵실험 비실시,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부인, 직접적으로 핵 위협 비행사, 군사독트린 부재, 군사적 배치 없음, 공개적 토론 부재, 핵무기 활동이 조직상 격리되어 있음이다.<sup>113</sup> 모호성에

<sup>112</sup>- Alagappa,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p. 90.

<sup>113</sup>- Hagerty, “The Power of Suggestion: Opaque Proliferation, Existential Deterrence, and the South Asian Nuclear Arms Competition”; Gaurav Kampani,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No. 1 (Fall 1998), p. 12.

의한 핵 억제제는 국토의 보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만, 외교정책에서 일정한 자유, 재래식 능력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sup>114</sup>

이러한 모호한 핵무기가 억제 기능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개발국의 의도와 능력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대국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게 된다.<sup>115</sup> 확산국가가 모호성을 추구하면 그 핵 억제의 효과성은 명확하게 판단될 수 없다. 그러나 상대측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추정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조잡하더라도) 핵무기가 (예를 들어 인구밀집 도시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하게 된다.<sup>116</sup> 다시 말해 “...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사 갈등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일정하게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확전에 대한 공포가 정치적 계산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위험의 존재 때문에 국가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신중해진다.”<sup>117</sup> 둘째, 소규모 핵무기를 은폐하고 이동하여 보호하는 것은 매우 쉽다. 따라서 적대국은 선제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신생 핵국가는 적은 숫자

---

<sup>114</sup>- Alagappa,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p. 90.

<sup>115</sup>- Victor D.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 217; Scobell and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 88.

<sup>116</sup>- Hagerty, “The Power of Suggestion: Opaque Proliferation, Existential Deterrence, and the South Asian Nuclear Arms Competition,” p. 272.

<sup>117</sup>- McGeorge Bundy, “Existential Deterrence and its Consequences,” in Douglas MacLean, (ed.), *The Security Gamble: Deterrence Dilemmas in the Nuclear Age*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4), pp. 3~13.

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차 보복공격에 필요한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신흥 핵 국가는 초강대국이 냉전시기 겪어왔던 명령 및 통제 상의 문제로 시달릴 가능성이 적다. 작고 단순한 핵 무기고는 중앙집권화된 소통과 감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중요한 정보와 지침은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sup>118</sup>

인도의 경험을 보면, 모호성에 의한 억제로부터 최소억제에 도달하는데 얼마마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인도는 1974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거행했지만, 1998년까지는 핵에 의한 억제를 인도의 공식안보정책으로 삼는 것을 명백히 거부했다. 그러나 1998년 두 번째 핵 실험의 시행과 함께 핵에 의한 억제를 인도의 공식안보정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도의 경우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안보 상황의 변화보다는 국내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 어쨌든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로부터 공표된 핵 능력에 기초한 핵 억제로의 진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핵심적이었던 문제는 세 가지였다. 즉 핵장치의 무기화, 운반수단 완성, 그리고 명령·통제·소통의 기초 구조 건설이다. 이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119</sup>

인도는 1974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그런데 실험된 핵장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이를 조립하는 데는 2년이 걸렸고, 규모가 크고 실용성이 없었으며, 수송기를 사용해서만 운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요한 정책변화는 1988년에 있었다. 라지브 간디 수상이 결국 무기화 결정을 내렸다. 그 직후인 1990년에 인도

<sup>118</sup> Mario E. Carranza, "An Impossible Game: Stable Nuclear Deterrence After the Indian and Pakistani Test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No. 3 (Spring/Summer, 1999), p. 13.

<sup>119</sup> Kampani,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pp. 14~15.

I
II
III
IV
V
VI

의 비밀 핵 무기고가 탄생했다.

무기화는 네 가지 단계를 포함했다. 핵 장치는 소형화되어 비행기로 운반이 가능해야 했다. 무기 설계는 전장 배치나 수송에 충분할 만큼 견고해져야 했다. 무기체계에 무장 및 안전체계를 장착하여 무허가 또는 우발적 폭발이 발생하지 말아야 했다. 1989년까지 인도 공군은 전투기를 개조하고 핵무기를 공중 운반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무기화와 동반하여, 핵전쟁 유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명령, 통제, 소통의 기초 구조가 건설되었다. 뉴델리의 민간 지도자들은 군부와 핵무기의 관리권을 놓고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민간인이 승리했다. 군부는 핵무기의 정확한 숫자와 핵전쟁의 경우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들은 공식화된 핵 doktrin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제들을 다루는 데 관한 자세한 지침을 작성했다. 이러한 지침들은 핵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열어보라는 지침과 함께 특정 전장 지휘관에게 전달되었다. 만약 뉴델리에 버섯구름이 발생하면, 특정 전장 지휘관은 안전금고에 가서 책을 열고, 첫째 페이지, 첫째 문단을 읽기 시작하며, 읽은 것을 기초로 순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항공 운반용 핵무기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탄도미사일용 소형화 핵탄두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도는 대기권재진입 운반체 기술을 개발해 갔으며, 1995년까지 탄도미사일용 경량 소형 탄두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인도는 세 번에 걸쳐 Agni IRBM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 이 중 두 번 성공하여 대기권재진입 운반체 기술이 확보되었다. 1998년 5월의 핵실험은 인도의 무기화 프로그램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1998년을 기점으로 모호성에 의한 억제 대신에 공개적으로 최소억

제를 표방한 인도는 이후 확증보복에 의한 억제론으로 입장을 바꾸어 나갔다.<sup>120</sup> 최소억제가 보복당할 위험과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데 비해, 확증보복은 보복이 확실히 발생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인도의 확증보복론은 초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인도가 실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인도의 핵 전략론에서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 (2) 북한의 핵 억제론: 모호성에 의한 억제로부터 최소억제로?

북한의 경우는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은 2003년 1월부터 플루토늄을 무기화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관한 모호성을 한층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 입장은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의 측면이 지배적이었으며 외부 관찰자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규정되었다.<sup>121</sup> 그런데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북한이 보다 명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요구를 제시하면서 초

<sup>120</sup>- Rajesh Rajagopalan, "India: The Logic of Assured Retaliation," Alagappa (ed.),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pp. 188~214.

<sup>121</sup>- 북한의 핵 전략을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에서 파악하는 글로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Scobell and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John S. Park and Dong Sun Lee, "North Korea: Existential Deterrence and Diplomatic Leverage," Alagappa (ed.),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pp. 269~295.

보적이지만, 보유 핵무기의 용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는 2006년 10월 3일 1차 핵실험 예고에 관한 외무성 성명, 그리고 2차 핵실험 한 달 전인 2009년 4월 21일 북한 외무성이 비망록의 형식으로 발표한 [조선반도와 핵]을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첫 번째 문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보다 잠정적인 것으로서 비핵화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서는 북한이 핵 보유가 보다 영구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보다 확고하게 드러나며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시하는 대신에 ‘핵무기를 공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문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며 핵에 의한 억제를 공식 안보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2006.10.3)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 우리는 언제나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아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 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다른 한 가지 변화는 북한이 핵전쟁 발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자세와 목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압 외교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호성에 의한 억제와 비교할 때 최소억제에서 핵무기의 효용은 단지 소극적 방어적 억제 차원을 넘어 더욱 확대된다. 앞서의 서술을 반복하자면,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는 국토의 보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만, 외교정책에서 일정한 자유, 재래식 능력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소억제의 핵심은 핵공격과 재래식 전면공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강제(compellence), 강압외교, 외교적 전략적 정책 자율성의 제고와

<sup>122</sup> 2010년 9월 21일자로 행해진 박길연 유엔대사의 유엔총회연설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련해서도 제한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행태는 2차 핵실험 이전에는 핵 모호성을 통해 대체로 모호성 억제 수준의 이익을 누렸다면,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보다 핵무기 보유를 활용하여 외교적 목적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과거에는 핵능력 증대가 억제와 함께 비핵화협상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정책 목표는 협박과 공갈 그리고 저장도 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과거에 비해 요구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 대해 보다 외교적 군사적으로 한층 공세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관하여 후에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 보유 고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초보적이지만 핵 독트린을 과시하고, 핵무기에 바탕 한 협박과 공갈을 구사하는 강압외교를 보다 노골적으로 시작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었다거나 북한의 핵 모호성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먼저 두 번에 걸친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모호성에 따른 핵 억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외부의 관찰자들은 열심히 추론하고 또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데, 바로 이러한 외부의 추론이 북한의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가로 간주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같이 광범한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국가의 정부, 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나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과 같은 명망 있는



민간 조직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능력 개발에 관심을 표할 때, 이들은 무심코 이들 국가 핵능력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주게 된다.”<sup>123</sup>

다음으로 핵 물질을 확보하고 핵실험을 성공시킨다는 것 하고,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핵 ‘무기’라고 부르는 것은 복합적 무기 체계로서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선진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의 여러 파편은 각기 충분한 분량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고도로 높은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구성요소들과 난해한 복잡성을 처리하면서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핵 운반 체계와 관련한 또 다른 기술의 복잡한 조합이 병존해야 한다.”<sup>124</sup>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에 대한 모호성을 완화하고 핵 지위를 공표한 다음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핵 능력과 전략은 무엇일까? 가까운 시일 내에는 도달할 수 없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거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목표는 최소억제가 될 것이다. 최소 핵 억제는 어느 국가가 핵탄두를 작전용 운반체계(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전폭기 또

<sup>123</sup> Hagerty, “The Power of Suggestion: Opaque Proliferation, Existential Deterrence, and the South Asian Nuclear Arms Competition,” p. 274; Scobell and Sanfor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 90; 이와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이 두 번에 걸쳐, 미국방부 보고서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 러시아”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했다는 기사를 실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발표,” 『조선중앙통신』, 2008년 12월 10일; “미국방성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표기,”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23일.

<sup>124</sup> Jacques E. C. Hymans,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No. 2 (2008), p. 27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강력한 조직과 고도의 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신-가산제적인(neo-patrimonial) 북한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 한다.

I
II
III
IV
V
VI

는 미사일에 장착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핵 공격을 받은 이후에라도 적대국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는 데 필요한 핵무기의 최소 숫자를 배치한다.<sup>125</sup> 위의 인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은 능력을 완비하자면, 북한은 무기로 사용할 수준의 핵폭발 장치 개발, 항공기 또는 미사일에 의한 운반수단의 완성,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을 위한 명령·통제·소통의 건설,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과 목표의 설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Scobell과 Sanford를 인용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II-2 평양의 핵 독트린: 현재 대 미래

	핵 모호성	핵 능력 공표 (확대)
1	핵군비 모호성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능력 과시 (핵실험)
2	독트린 모호성 공격용인가 방어용인가?	독트린의 명확화 공격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핵 사용 목적의 모호성 전략적인가 전술적인가?	핵 사용 목적의 명확화 전략적인가 전술적인가?
4	목표물의 모호성 주요 목표물: -대군사 목표 또는 대가치 목표 -일본, 한국, 미국?	목표물을 명확히 제시 주요 목표물을 명시?
5	운반수단의 모호성 무엇인가?	운반수단의 명시 -미사일? -비행기? -잠수함?
6	핵우산의 모호성 북한용 핵우산?	핵우산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한반도 전체용 핵우산?

<sup>125</sup>- Carranza, "An Impossible Game: Stable Nuclear Deterrence After the Indian and Pakistani Tests," p. 14.

## 다. 북한 핵무기의 군사적 외교적 효용

여기서는 북한의 공식 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에서부터가 아니라, 북한이 처해있는 여러 여건으로부터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추론한다. 즉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특성과 전략적 환경으로부터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고찰한다. 첫째, 군사적 갈등 과정에서 실제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에 핵공격의 목표와 피해에 대한 추정이다. 셋째, 핵무기 보유 그리고 핵 사용 위협을 영향력의 확대, 협상 수단 및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1) 북한의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의 목적

먼저 북한과 같은 국가는 상당한 위협을 감수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sup>126</sup> 그 이유는 북한이 위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에게 중요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영토 손실, 정권의 대내 정치권력 장악 등이 있다. 이처럼 핵심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결의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한은 자신의 핵심이익(정권생존)이 걸려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한미 연합군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패퇴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 어떠한 일이라도 할 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한국과

<sup>126</sup> Dean Wilkening and Kenneth Watman, *Nuclear Deterrence in an Regional Conflict* (Santa Monica, CA: RAND, 1995); Kenneth Watman and Dean Wilkening, *U.S. Regional Deterrence Strategies* (Santa Monica, CA: RAND, 1995).

I
II
III
IV
V
VI

미국은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약한 쪽인 북한이 확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평양은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고 해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핵무기는 전술적이기 보다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수량도 작고, 그 폭발력도 크지 않으며, 또한 그 정확성에서 상당히 의구스럽다. 이러한 핵전력은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극적인 군사 성과를 내는 방향에서 사용되기는 어렵다.<sup>127</sup>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목표 지점만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으로 북한은 아직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28</sup>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로 정치적·전략적 차원의 고려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전략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129</sup>

첫째, 북한은 미국이 지역에 간섭하거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자신의 핵을 통해 억제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압력이 강해지고 구체화되면, 이에 맞서서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핵 위협을

---

<sup>127</sup>- Bruce W. Bennett,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anta Monica, CA: RAND, 2008), pp. 46~50.

<sup>128</sup>- 황일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 p. 163.

<sup>129</sup>- 아래의 4가지 이유는 David Ochmanek and Lowell H. Schwartz, *The Challenge of Nuclear-Armed Regional Adversaries* (Santa Monica, CA: RAND, 2008), pp. 37~45; 황일도는 북한의 핵 사용가능성을 ‘개진 초기 전략적 핵 사용’, ‘개진 초기 전선 사용’, ‘개진 초기 후방기지 투하’, ‘최후반격용도 사용’으로 나누어본다. 황일도, 위의 글, pp. 166~171.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핵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에는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경우 공개적으로 무기를 실험한다든가, 지역 내의 미군을 공격할 군사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둘째, 위협 확대가 미국이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북한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무력화시키거나 패퇴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초기국면에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또는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sup>130</sup> 그 이유는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정권이 갈등의 시작과 함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의 수뇌부 제거 능력, 급격한 정권 붕괴 능력을 고려하여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의 군사작전을 중단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이 몇 개 안되는 핵무기를 찾아내어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확전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개전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직 보강되지 않아 가장 취약한 시기로서, 미국의 항공 및 미사일 방어에 허점이 많은 시기이다.

셋째, 적대국은 지역 내의 미국 동맹국을 협박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 목적은 동맹국인 일본이 자신의 영토가 미국 군사력 투사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형성된 정치적 동맹을 깨고자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위협에 노출된다.<sup>131</sup> 이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의 내부

<sup>130</sup>- Ochmanek and Schwartz, *The Challenge of Nuclear-Armed Regional Adversaries*, pp. 38~39.

<sup>131</sup>- *Ibid.*, pp. 44~45.

I
II
III
IV
V
VI

목표물을 공격한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투자를 저지하고 자 시도할 수 있다. 그 목표물에는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또는 군사력 배치에 중요한 공군기지, 항구, 물류중심지와 기타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대결에서 미국의 목표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정권교체를 강요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정권이 붕괴할 위협에 처하는 경우 그대로 패퇴하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희박하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또는 설령 핵 보복을 당하더라도 정권 붕괴라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정권 생존이 위협에 처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을 신뢰성있게 위협하여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삼가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 (2) 핵 공격 목표와 피해 추정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북한 핵 공격의 목표물은 전술적 군사목표가 아니라 가치적 대상 다시 말해 주요 도시나 핵심적 경제하부구조가 될 개연성을 높여준다.<sup>132</sup> 이 같은 차원에서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Bruce E. Bennett**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제시한다. 즉,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중에서 많은 것을 한국이나 일

---

<sup>132</sup>-Wilkening and Watman, *Nuclear Deterrence in an Regional Conflict*, p. 31; Ochmanek and Schwartz, *Ibid.*, p. 23; Bennett,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pp. 23~44.

본의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 목적은 한국, 일본과 미국을 강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한미 군사력이 반격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를 넘거나 평양에 접근하는 경우, 부산과 같은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력이 계속 진군하는 경우 실제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갈등에서 철수하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거부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아직 대부분의 무기가 아직 살아있고 핵무기 사용을 통해 갈등에서 승리하는 레버리지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갈등 초기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억제/강제를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기 폭발을 통한 전자기장 진동(EMP) 효과를 과시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신호를 발신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갈등 초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개전초기에 사용할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과 사용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sup>133</sup>

그러면 만약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의 도시를 공격하는 경우 그 피해는 어떠한 수준일 것인가? 북한이 10Kt의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하는 경우, 피해는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sup>134</sup>

인명피해: 사망자는 최소 12만5천명에서 최대 20만 명이상이다. 사망 및 부상을 합하면 29만에서 40만 명이상이 될 것이다. 사망자 중에서 20%만 즉사할 것이다. 대략 30만 명 중상자, 20만 명의 부상자가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다.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방사능 노출 등 단순한 걱정 때문에 수십만 명이 추가로 치료를 받고자 할 것이다.

<sup>133</sup>- Bennett, *Ibid.*, p. viii.

<sup>134</sup>- Bennett, *Ibid.*, pp. 57~58; 서울에 대한 핵 공격시 피해규모 시뮬레이션은 황일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 pp. 148~159 참조.

I
II
III
IV
V
VI

경제피해: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10년 이상 동안 매년 적어도 10% 감소하여, 총 1조2천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인프라 손실은 1천2백억 달러,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2천 2백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총 손실은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 (3) 핵무기의 정치적 외교적 효용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극단적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사태가 이러한 방식으로까지 악화될 것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핵무기 보유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핵무기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사용한 징벌을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을 조작하는 것을 통해 정치적 외교적 이득을 올릴 수 있다.<sup>135</sup> 핵 보유 국가는 이러한 잠재성과 기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핵무기의 효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강압외교, 둘째,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 셋째, 권력과 위신이다.<sup>136</sup>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한국에 대해 강압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한국에 대해 추가하는 위협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협으로 된다. 강압외교란 현상을 변경하

---

<sup>135</sup>- Alagappa,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Security: Far-Reaching Influence and Deterrence Dominance," p. 80.

<sup>136</sup>- *Ibid.*, pp. 84~86.



거나 또는 적대측이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여타 외교목적  
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핵전쟁으로 확전하는 위협을 활용하  
는 것을 포함하여) 강압을 사용하여 “적대측이 이미 시작한 행위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노력”<sup>137</sup>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핵전쟁이 터질 위협을 방패로 사용하여 어떤 국가는 협박과 공갈을  
구사하거나, 또는 (재래식 또는 저강도 전쟁과 같은) 저강도 폭력을  
행사하고 핵전쟁을 위협하는 것을 통해 다른 국가가 어떤 특정 문제  
에 대해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폭력의 위협과 사용이 외교와 융합된다.<sup>138</sup>

앞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위협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신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북한의 핵심 논리는 ‘핵전쟁이 터질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삼중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첫째, 그들이 보기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다. 둘째,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세적 도발을 강화하더라도 한국과 미  
국이 이에 대한 대응보복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계기로 수행된 한-미의 대응 훈련  
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서 나타난다. 셋째, 궁극적으로 공세적  
도발의 강화, 핵전쟁 발발 협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북  
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나중에 다시 서술하게 되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  
국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도발을 저지르더라도 보복당하지 않을 수

---

<sup>137</sup>- Alexander George, “Coercive Diplomacy,”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ed.), *The Use of Forc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4), p. 71; Alagappa, *Ibid.*, p. 84.

<sup>138</sup>- Alagappa, *Ibid.*, p. 84.

I
II
III
IV
V
VI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보다 안심하고 공세적 저항도 도발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생존환경을 교란하고자 기도할 수 있다. 그 목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해당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활용된다. 핵무기는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대외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를 통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비핵 국가를 강압하거나 정책 선택을 좁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냉전시대의 주요 동맹국이 북한과 상의 없이 북한에 위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시켰던 것을 경험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에도 현실적으로 자신보다 현저하게 강력한 국가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냉전 이후 유일하게 중국에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유사시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권력과 위신을 높여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아시아의 핵국가로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 함께 동열에서 거론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비핵국가인 한국을 배제하고 핵국가인 미국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논리를 더욱 강화한 셈으로 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 권력과 지위, 또는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 보유가 ‘조선반도’와 ‘민족’을 위한 핵 억제력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 Ⅲ.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이 제기하는 도전



여기서는 북한의 핵 보유 고수전략이 제기하는 네 가지 도전을 다룬다. 첫째, 북한의 대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둘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 영향이다. 셋째, 안보측면에서 제기하는 도전이다. 넷째, 국제관계에 미치는 도전이다.

## 1. 북한 내부 영향

### 가. 대내정치 파급 영향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핵무기 보유가 정권의 정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의 명령과 통제와 관련된 인물의 정치적 가치를 높인다는 점이다. 셋째,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계체제 구축과 핵무기 보유 문제이다.

첫째, 핵 보유가 북한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 핵무기 개발은 미사일개발과 함께 선진적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거론되는 것의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핵국가로서 동격의 협상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우리민족을’ 보호하는 핵우산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무기 보유는 민족주의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며,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제2차 핵실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를 열었고, 노동

I
II
III
IV
V
VI

신문에 “내나라는 강하다”라는 정론을 싣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무적강국은 정의로운 인민에게는 자랑높은 땅으로, 침략자들에게는 무서운 땅으로 된다. 세계에는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는 나라도 많고 방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런데 조선에서 쏘올리는 위성은 원쑤의 아성을 왜 그렇게도 크게 뒤흔들어놓는것인가. 조선에서 무엇이 한번만 발사되어도 지구가 깨지는것처럼 떠들고 조선에서 핵시험의뢰성이 한번 올리어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것처럼 대국들이 몸살을 앓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것인가. 그것은 자주를 생명으로 하는 이 땅에 대한 공포이다.

둘째,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 및 사용이 북한정권에게 소중한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되어 있는 관료체와 책임자는 내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존하는 북한 최고 엘리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조명록, 오극렬, 주규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lexandre Y. Mansourov의 논문과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한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두 글이 제시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exander Y. Mansourov는 김일성 시대 북한의 핵개발을 다루면서,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명령과 통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한다.<sup>139</sup>

북한의 능력을 보았을 때, 북한은 핵무기를 미그기나 잠수함이 아니라 노동-1 이동발사대를 통해 사용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북

---

<sup>139</sup>- Alexandre Y. Mansourov, “The Origins, Evolution, and Current Poli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2, No. 3 (Spring/Summer, 1995) pp. 30~32.

한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측면에 대한 작전 명령과 통제를 아마도 공군이 가지고 있으리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영변과 백천을 포함 북한의 핵시설은 조선인민군의 주요 공군기지 가까이 있거나 영내에 있다. 둘째, 파키스탄과 이란 등의 나라와 군사 및 핵 협력과 관련한 문제를 토론할 때 공군지휘관인 조명록 장령이 북한군사대표단의 대표로 활동했다. 셋째, 처음부터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적용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었다. 북한에는 공군이 미사일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공군이 미사일과 핵무기의 통합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오진우와 오극렬은 공히 인민무력부장직을 수행했는데, 두 사람 모두 공군출신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동료 그리고 육군이나 해군에 비해 핵무기에 대한 더 잘 알고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한 보고서는 김정일 시대 핵무기에 대한 명령과 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sup>140</sup>

북한의 핵무기는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해 핵무기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 무기와 군장비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2003년부터 백세봉이 이 기관을 맡고 있다. 그는 2003년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류 산하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독자적 기관을 통해 핵무기를 통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는 당중앙위 군수공업부장으로 1990년대 미사일과 핵개발에서 주요 역할을 했으며 1998년과 2009년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책임자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

<sup>140</sup>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p. 12~13.

I
II
III
IV
V
VI

정일이 핵탄두 관리를 조선인민군에게 이양할 것을 명령한다. 김정일은 주규창에게 무기를 무장할 것을 지시하며, 이는 아마도 하루나 이틀 걸릴 것이다. 김정일은 총참모부를 거치지 않고 미사일지도국에 직접 명령을 내려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하고 발사 장소에 배치할 것을 명령한다.

셋째,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후계자와 후계체제의 대내외 위상을 정착시키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체제는 2009년 1월부터 공식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이 공식으로 세상에 노출되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생존환경과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후계체제의 등장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후계 추진의 경우에도 대내외 기존 노선이 대체로 답습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볼 때, 2005년 이후 북한은 대내외 정책적으로 다섯 가지 목표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며, 핵 보유 국가로 행세한다. 둘째,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셋째, 시장억압, 국가의 경제 간섭 강화 등을 기조로 반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투자 및 해외 원조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반개혁적 개방정책)한다. 넷째, 공안 통치를 통해 대내 정치 안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를 추진한다. 다섯째, 한국과는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는 한국이 북한당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형성한다.

2005년 이후 방향이 잡힌 이러한 정책 기조의 설정과 추진은 북한이 직면했던 대내외 상황뿐 아니라 후계체제 수립 문제와도 연관 지어져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2009년 1월 김정은



이 후계자로 공식 내정된 시기로부터 한 단계 더 강경해졌다. 북한은 2009년 이후 대내적으로 100일 전투, 150일 전투, 그리고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대외적으로 2009년 4월 미사일 실험, 5월 핵실험, 7월 이후 유화정책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 추진, 2010년 1월 이후 재차 한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2009년 이후 취해진 일련의 강경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생존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충격적 요법을 통해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력을 현저히 개선하며,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현저히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의 이중의 의미에서 정권 생존환경이 개선되어야,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 이후 북한이 취한 대내외 강경조치가 김정은의 이름과 연계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했다. 그렇다면 2009년 이후 대내외 강경조치는 북한정권의 대내외 생존의 활로를 여는 것뿐 아니라, 김정일 이후 등장하는 후계 진용, 결국 김정은이 결코 만만하고 유약한 체제와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암시적으로 신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는 사실상 2차 핵실험과 동시에 출발한 것이다. 당분간 그 입지가 취약할 후계자가 정책 원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핵 능력 증가를 후계자의 대외적 위세를 과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한국과 미국을 북한의 전략구도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서 그 공을 후계자의 담력과 천재적 전략 전술로 선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 나. 대내경제 파급영향

### (1) 핵 보유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기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핵 관련 기술과 물자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획득과 군비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은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 2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핵무기 보유에 따른 핵개발 프로그램의 군사적 용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방법은 핵 관련 기술 이전과 핵물질 및 관련 제품의 수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핵 기술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기타 산업부문에의 적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정적이어서 가시적인 미래에 그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화적 용도의 핵 기술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핵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감소 효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변되고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핵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핵 관련 기술과 물질 및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내부 투자 및 핵 실험을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 보유에 따른 군비경쟁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핵개발 프로그램의 가동이 민수부분의 투자 여력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어려움을 지속시키거나 가중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장처럼 핵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핵 기술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득 취득

고이케 전 일본 방위상은 독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에 기고한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가 아시아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북한 내 정보원이 제공한 노동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 용각산 총무역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는 이란으로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수출하는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또한 “북한이 이란과의 미사일, 핵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41</sup>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등이 포함된 대북한 제재 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이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 다이크 알주르 지역에 있는 열중성자 증식로의 설계와 건설을 지원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도왔다”고 지적하였다.<sup>142</sup>

북한이 미얀마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한 김정일의 도움으로 향후 5년 내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비밀리에 동굴을 뚫어

141. “북한, 대이란 핵·미사일 수출회사 설립,” 『YTN』, 2010년 4월 16일.

142. “북, 유엔 제재망 피해 핵기술 계속 수출,” 『서울경제』, 2010년 5월 28일.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미얀마 망명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나옹 라인 산악지대의 지하에 원자로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기술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크기는 추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거래 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태도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핵기술을 이전해 주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입할 수도 있고, 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3국을 개입시킨 3자 거래의 형태를 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와의 핵개발 커넥션의 경우에는 북한이 단순하게 핵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와 같은 기술개발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핵 보유에 따른 군비 지출 감소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개발을 단행한 핵심적인 이유가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3</sup>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N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벌어진 데다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그들 정권을 겨냥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이 국장은 “북한군의 능력은 낙후된 무기체계와 군사전투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

<sup>143</sup>- 조태근, “美 ‘北, 재래식 전력 열세로 핵개발..핵보유국 인정 원해,’” 『민중의 소리』, 2010년 2월 3일.

신체 상태, 줄어드는 훈련시간, 사회 인프라건설 지원이 차출된 군병력 등의 문제점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윙통성 없는 리더십, 부패, 저하된 사기, 낙후된 무기, 취약한 병참시스템과 지휘통제 체제의 문제점 등도 북한군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력이 1970년대 중반 역전된 이후 계속해서 그 격차가 확대되자 남한과 군사비 경쟁을 통한 재래식 군비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도 1970년대라고 분석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외환부족 사태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면서도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것을 비합리적인 태도로 비난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의 논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03년 6월 9일 ‘우리의 핵 억제력은 결코 위협수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협 공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망적으로 재래식무기를 축소하며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리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의 군비 지출 감소 효과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sup>144</sup>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데 경제력의 한계

144. “우리의 핵 억제력은 결코 위협수단이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9일.

로 재래식 군비증강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무기로 군사력 약세를 만회한 이후 군비를 줄여 남은 재원으로 경제개발에 사용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핵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 (가) 핵 개발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경제난 심화 초래

북한은 1979년부터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2차 핵실험을 단행할 때까지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6~1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sup>145</sup> 북한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 북한의 수출규모가 5.6억 달러와 5.1억 달러로 추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사 부분에 국가재정의 투입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군사강국’을 건설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체제전환의 길을 걷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핵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평양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었던, 그에 따라 아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1990년대의 기간 동안에 제한된 자원을 식량문제 해결

---

<sup>145</sup>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국방부), <<http://biog.naver.com/jang4852/40029649834>> (검색일: 2010.11.3).

에 사용하기 보다는 체제 유지의 수단인 핵무장을 위해 투입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핵무기의 보유를 고수하는 정책을 선택하면서 직면하게 된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의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일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부터 부과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경제제재는 매우 제한적으로 추가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1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쟁까지 115번의 경제제재 조치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Economic Sanction Reconsidered**에 따르면,<sup>146</sup> 115번의 경제제재 중에서 34% 정도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한 이 경제제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제적으로 부과되었던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경제제재

---

<sup>146</sup>-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Kimberly Ann Elliott and Barbara Oegg, *Economic Sanction Reconsidered* (Washing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9); Kimberly Ann Elliott, "Economic Leverag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No. PB03-3 (Apr. 2003), 재인용.

I
II
III
IV
V
VI

조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첫째, 경제제재 조치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성취하기 쉬운 경우<sup>147</sup>

둘째, 제재 대상 국가가 제재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제재를 가하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무역을 실행할 경우

넷째, 제재를 가하는 쪽이 경제제재의 충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때

다섯째, 제재를 가하는 쪽이 경제제재를 가했을 때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반면에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클수록 제재조치의 성공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필라델피아대학의 랜들 뉴햄(Dr. Randall Newnham) 교수가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최한 대북경제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효율적인 경제제재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경제, 활발한 교역, 정치적 자유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핵개발 이전부터 부과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주는 영향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sup>147</sup> 이때 대부분의 경제제재 조치를 추진하는데서 한계로 작용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제재조치를 받는 대상이 제3국으로부터 이 조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주변국의 강력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경제제재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자협력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중국의 참여 정도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경제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와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금융 기구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자금의 유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과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경제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3) 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 (가) 핵 보유와 경제정책의 관계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한다는 사실이 경제정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핵 보유라는 군사부분의 정책이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

I
II
III
IV
V
VI

게 될까? 핵 보유가 북한의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수에 해당되는 부문과 선택 가능한 변수에 해당되는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수(常數) 부문: 자력갱생 기초, 중국에 대한 의존 확대, 대외개방 확대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핵 보유 고수에 따른 파급효과로 북한의 대외적 경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보유정책에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가 경제관계의 개선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대북압박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의 변수는 중국정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북한의 정치적 혼란과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기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에서의 경제압박으로 인하여 경제지원이나 투자가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자체의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변수(變數) 부문: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경제의 자유화  
핵 보유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는 재원조

달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게 경제지원을 요청하거나 이 국가들로부터의 재원조달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으로서는 가증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 분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경제정책의 기초를 조정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로는, 국방부분에 투입되던 자원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줄여서 민수부분으로 전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핵 보유로 군사적인 억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방부분에서 사용하던 자원을 민수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기초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강한 반시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 기초를 자유화 확대로 전환할 것인가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생산 증대 및 물자의 공급 역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어 시장 활동을 포함한 사적경제활동을 통제할 경우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 침체 현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시장활동을 포함한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자유의 폭을 제약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 (나) 핵 보유하의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특징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그 성격에서 대내부문과 대외부문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내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내 경제정책을 통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경제정책을 통해서는 기술과 재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력 복원과 공식경제부문의 회생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규모 외자도입에 주력함으로써 SOC 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특구를 건설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강경한 정책 기초하에서 경제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생산활동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내부 경제 시스템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과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남북관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측면을 살핀다. 첫째, 북한의 대남 자세가 더욱 무모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이 강화된다. 셋째,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 조치 및 대북제재의 강화로 남북 간에 경색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내부의 붕괴 또는 내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가지고 대응책을 세울 것이지만, 북한은 이를 매우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논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가. 대남 자세의 강경화

북한의 대남자세가 더욱 무모해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새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 보유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과 위신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sup>148</sup> 따라서 신생 핵국가는 핵 보유 직후 얼마나 더 큰 추가적 영향력과 위신을 누릴 수 있는지를 주변국을 상대로 시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신생 핵 국가는 과거에는 취하기를 주저하던 보다 대담한 결정과 행위를 취하면서 주변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측정하는 가운데 학습 및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의 핵실험을 거행하고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한국 및 주변국에 대한 자세와 요구도 과거와 비교할 때 훨씬 무모하고 대담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 본다. 그 첫째는 비핵화 관련 협상에서 북한이 주변국에 대해 협상 조건을 높이는 문제이다. 둘째는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을 보다 무모하게 주변국을

<sup>148</sup> Ochmanek and Schwartz, *The Challenge of Nuclear-Armed Regional Adversaries*, pp. 32~33.

I
II
III
IV
V
VI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실제로 보다 대담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 조건을 높이는 문제를 보자. 이 글의 제Ⅱ장 2절의 ‘핵 보유 고수 정책과 향후 전개 예상’ 이미 서술한 것처럼, 북한은 2009년도 하반기에 비핵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꾸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2009년 초부터 과거와 비교할 때 강화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를 2009년 후반기에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2004~2009년 사이 미국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비핵화·후평화협정 단계론>에 입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2009년 후반에 <평화협정 선행론>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sup>149</sup> 첫째, (북한을 비핵화의 상대로 보지 말고) 북한을 이제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라는 것, 둘째, (미국과 관계정상화는 이제 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로, 선관계 정상화·후비핵화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 셋째, (비핵화를 통한 신뢰조성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신뢰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평화체제에 앞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과거 6자회담 방식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갈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진전이 있더라도 북한은 자신의 양보에 대해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

<sup>149</sup> 이글의 Ⅱ장 2절 및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216~223.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sup>150</sup> 첫째,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자신의 조치와 관련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더욱 많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 정부 간 관계에서 거래에서도 훨씬 높은 정치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은 핵국 가입 다시 말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임을 내세워 비핵국가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북 직접 거래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넷째,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한 군사문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더욱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 나. 대남 도발의 무모성 증가

다음 문제는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을 보다 무모하게 협박하는 또는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신생 핵무기 보유 국가는 주변국에 무모한 도발을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 때문에 쉽사리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거나 또는 정말로 그러한가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Ochmanek과 Schwartz는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그리고 가능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sup>151</sup>

소련이 1949년 9월 1차 핵 실험을 거행한 이후, 스탈린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선’을 열어도 미국이 소련의 핵 잠재력을 두려워하여

<sup>150</sup> 만약 이란이 핵 무장에 성고하면, 이란도 유사한 행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은 다른 OPEC 멤버 국가들이 석유 생산 쿼터를 이란에게 유리하게 배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Ochmanek and Schwartz, *The Challenge of Nuclear-Armed Regional Adversaries*, p. 35.

<sup>151</sup> *Ibid.*, pp. 33~36.

I
II
III
IV
V
VI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다.

냉전시기 중이던 1969년 중국이 소련의 국경 무력을 공격한 것이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 국가는 보복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적대국과 제한적 군사갈등을 치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이 1999년 카시미르의 **Kargil** 지역으로 침입한 것이다. 1998년 핵실험을 거행한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최근에 과시한 핵 능력이 인도의 우세한 재래식 무장력을 상쇄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대와는 다르게 인도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했다. 파키스탄은 이후 군대를 직접 침투시키지는 않았지만, 테러와 여타 형태로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자신의 핵능력이 적어도 아직까지 그 수준이 어디인지는 모르는 한계수준까지 인도의 군사행위를 억제할 수단을 준 것으로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미국전문가는 유사한 현상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즉 이제까지 통상적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위협이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sup>152</sup>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즉, 북한은 과거 심각한 대남

---

<sup>152</sup>- Scott Snyder, "The Cheonan Attack: Torpedoing Chance of Peace?," *Yale Global* (27 May 2010); Victor D. Cha,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May 26, 2010); David E. Sanger and Choe Sang-Hun, "North Korea Cuts All Ties With South," *The New York Times*, May 25, 2010.



도발을 일으키고도 보복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9년 청와대 습격, 1984년 랑군 폭파 사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등이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군사도발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상정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평가에다가, 핵무기를 두 번이나 실험하여 ‘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즉 낮은 단계의 재래식 도발을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안함 침몰 이후 한·미가 재래식 억제력을 재확립하게 추진했던 2010년 7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sup>153</sup> 그런데 이는 3차 핵실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sup>154</sup> 즉 이제까지 남북한 사이에 기능해오던 재래식 억제가 무너지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55</sup>

153.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 식의 강위력한 억제행동으로 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을 짓부셔 버릴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24일. 이는 8월 24일 김영남의 선군혁명영도 5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반복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2일.

154. Victor D. Cha,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heonan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3rd KINU-USIP Washington Workshop: *After the Trip and the Ship: Assessing Prospects for ROK-U.S. Coordination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Jun. 15, 2010), p. 2.

155.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신입 정보국장 James Clapper의 발언에도 나타난다.

## 다. 선제타격 능력과 확장억제의 강화 및 군사 긴장의 증가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 간 및 동북아 국가 간 군사긴장을 증가시키고 남북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여 한국은 부득이 선제타격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공세능력 확대로 반발할 것이며, 일부 주변국은 자신에 대한 위협 증가로 간주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향은 역으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선제타격능력 강화 문제를 보자. 장사정포 등 과거의 대량살상능력에 추가하여 북한이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배치하는 가능성이 대두하는 경우, 한국은 이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 기본개념은 선제타격이다. 한국군의 원칙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한다”<sup>156</sup>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관 장소 파악 및 사용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보 능력 확보, 핵능력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 미사일 요격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6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수정안)은 유사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타격에 나선다는 개념에 입각하

---

즉 “(평양의 천안함에 대한 도발이) 정보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북한이 다시 한 번 우리의 동맹이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통해 대내외적 정치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U.S. spy chief nominee warns of N Korea ‘direct attacks,’” *BBC NEWS U.S. & Canada*, Jul. 20, 2010.

<sup>156</sup> 이상현, “김국방,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 『연합뉴스』, 2010년 1월 20일; 김귀근, “군, 북핵사용시 선제타격 능력 확보,” 『연합뉴스』, 2009년 9월 18일.

여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능력을 확충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sup>157</sup>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선제타격론을 북한에 대한 노골적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sup>158</sup>

한편,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확장억제란, 핵 보유국가가 자신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동맹국의 국토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핵무기의 억제 기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시기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 억제능력에 의존해왔다.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저하했다. 그러나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한국은 다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sup>159</sup> 그런데 문제는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제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sup>160</sup> 즉 미국의 한국 안보보

157. 윤상호, “북 핵-미사일 발사징후 땀 선제타격, 『동아일보』, 2009년 6월 27일. 북한 미사일 위협이 대두할 때 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 또는 그러한 색깔을 띤 주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등장한다.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 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Test This Missile,” *The Washington Post*, Jun. 22, 2006; 송화섭,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전수방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158. 김성진, “북한군 총참모부 ‘선제타격론은 선전포고,’” 『연합뉴스』, 2010년 1월 24일.

159. Kang Choi and Joon-Sung Park, “South Korea: Fears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Alagappa (ed.),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pp. 373~403.

160. Alagappa,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p. 91.

I
II
III
IV
V
VI

장에 대한 확실한 의지 천명, 동맹국에 군대와 전술 핵무기의 주둔, 한국의 재래식 능력의 강화, 이를 미국의 능력과 결합하여 확전 잠재력을 과시, 탄도미사일방어를 개발하고 배치하여 한국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보호, 정기적 훈련을 통해 결의를 과시하고 평판을 높이는 것 등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앞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고찰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 능력의 강화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sup>161</sup>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강화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 미국, 일본에게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대비태세와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며 상호 협력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양상의 일부를 자신에 대한 군사위협 증가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군비확장을 추구할 것이다. 나아가 만약 핵무기 보유를 뒷배경으로 북한이 보다 대담한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를 강력히 응징 위협하고자 한다면, 천안함 사태 이후의 상황전개가 보여주듯이, 한·미 대 중국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성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예상 도발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경우 남북 간의 긴장이 나선형으로 증폭할 수 있다.

---

161- 2009년 10월 22일 발표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미국의 방위공약 언급 수준이 확연히 강화되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 구현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본토가 위협받는다 인식 아래 핵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과 MD체계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하고 유사시 응징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귀근, “美, SCM서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연합뉴스』, 2010년 10월 22일.

## 라. 대북제재 강화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 조치 및 대북제재의 강화에 따라 북한의 주변국가와의 관계 및 남북 간에 경색이 강화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존속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지구적 비확산체제에 보다 규모가 크고 심대한 불안정을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면 평양이 원료, 기술과 노하우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는 북한에 대해 다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것으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제재 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제재 1874호가 취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게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5월 24일 9가지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는 1)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2) 남북교역 중단, 3)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5)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6)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7) 대북 심리전 재개, 8)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9) PSI에 따른 역내의 해상차단훈련실시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2005년에 발효되었고 북한을 포함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자의 그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행정명령 23382에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추가했으며, 9월 1일 천안함 기습 공격과 2009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했다.<sup>162</sup>

<sup>162</sup> 하태원·윤완준·김영식, “미, 대북 추가 제재조치,” 『동아일보』, 2010년 9월 1일.

## 마. 급변사태 대비 강화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의 항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적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변국은 이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입안해 왔는데, 북한은 이를 매우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내부불안에 빠지는 것은 극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그 핵무기의 항배는 미국과 일부 동맹국에 대해 단일한 최고수준의 국가안보 위협을 즉각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163</sup>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적어도 북한 유사시에 주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sup>164</sup>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또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으로서 작계 5029<sup>165</sup>가 작성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동향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2010년 1월의 이례적인 국방위 대변인 성

---

<sup>163</sup>-Michael O'Hanlon, "Dealing with the Collapse of a Nuclear-Armed State: The Cases of North Korea and Pakistan," *The Princeton Project Papers* (Sep. 27, 2006), p. 1;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Special Report*, No. 42 (Jan. 28, 2009) 참조.

<sup>164</sup>-북한 붕괴의 경우 당연히 한국의 역할이 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8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데서, 그다지 변변찮은 수단을 보유한 단 하나의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책임하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중국 및 여타 나라와 사전에 조심스럽게 작전의 기본개념에 대해 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 (Sep. 3, 2010).

<sup>165</sup>-작계 5029의 내용에 대해서 황일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 pp. 232~243.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은 2010년 9월 9일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변경해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되었다. 김귀근·김호근, "샤프, 北 안정화작전 언급 배경과 의미," 『연합뉴스』, 2010년 9월 9일.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66</sup>

세상에 이미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진의 연합 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다. 일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 바. 대북정책 딜레마의 증가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고 무기고를 개선 강화시켜 갈수록, 한국의 대북정책의 딜레마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적어도 묵상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남북관계 재개와 확대의 조건으로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는 정체하거나 긴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를 잘게 썰어 보다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보다 무모하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협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취하는 양보에 대해 한국이 얼마만한 보상을 하느냐를 놓고 한국 내부에서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많다.

1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5일.

### 3. 안보적 측면

#### 가. 안보 위협의 증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고 지속될 경우 우리는 매우 심각하고 다양한 북한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 실험 이전과 이후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장기화나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상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단순한 가능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 핵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나 대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나, 협상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왔으며, 실패에 대비한 대책에는 소홀하였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도전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도전의 성격과 수준에 부합되는 정책과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의 질적 변화를 초래한 상황이며, 군사적 모험 가능성이 증가하여 평시에도 안보불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실제 사용이 아닌 사용위협(일부 모호성을 가미)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 상에서의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대남 및 대미·대일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



한의 이러한 위협은 우리가 어떠한 억제수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 핵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질적 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핵융합을 완성하였고 핵폭탄보다 더한 억제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상쇄함과 동시에 외부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켜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사 전략상에서의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안보상황과 분석과 평가의 목적을 위해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 위협의 성격을 평시(平時) 혹은 위기 시 사용위협과 가능성에 따른 상황 불안 증가와 전쟁 상황 시 사용에 의한 위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평시와 관련해서는 먼저 심리적 위기감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제약, 다음으로 사용위협과 상황의 불안정성 증가를 거론한다. 전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보유에 따라 먼저 전쟁 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수단 확보, 그리고 북한의 선제사용 가능성을 논한다.

#### 나. 심리적 위기감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제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확충해 나간다고 할 경우, 적절한 대응수단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불안감을 갖게 하는

I
II
III
IV
V
VI

원인이 되고 국민 대다수는 심리적 위기감과 위축감을 심각하게 갖게 될 것이다. 즉 국민들은 항상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을 하고 핵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민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안보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는 인접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항상 한국민들은 공포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 공포는 과거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포심은 위기나 유사시 사회적 혼란을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에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공포의 변화와 심화는 경제적 측면에도 파급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생활의 위축은 물론이며, 위협과 공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이로 인한 예산의 편중된 편성과 지출도 초래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복지보다는 안전에 우선하여야 함에 따라 복지부분에서의 위축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guns vs bread’라는 공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국방예산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예산분야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지속되고 증가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불안이 지속되고 증가하는 국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는 의문이 되는 사항이다. 안보불안은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도 발생케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 역시 국내에서의 생산과 경제활동보다는 해외에서의 설비투자 및 기업 활동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의 증가는 안보불안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사회적 불안감과 부담으로 연결되며, 안보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물론 신용등급의 조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 다. 사용위협과 상황의 불안정성 증가

북한은 자신들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대량살상무기를 적절하게 한국과 미국에 대해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즉 보유를 넘어 사용위협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위기 상황이나 대치 상황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현재보다 증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단순한 공갈이나 협박의 수준을 넘어선 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수용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는 것도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불안감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고 증가할 것이며, 제약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요약컨대, 위기 상황 그 자체가 가지는 불안감과 불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상황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안보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기 보다는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에서 접

I
II
III
IV
V
VI

근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선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라. 전쟁 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수단 확보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를 상정한 군사적 위협 역시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으로 억제와 방어태세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라는 3대 확장억제태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전전상황(pre-hostility)에서부터 전쟁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군사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의 군사전략의 기본 가정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북한은 보다 다양한 군사적 대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혹은 징후 발생 시 즉각 사용할 것인지(use it before lose it) 아니면 일종의 억제수단(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에 대한 방책으로 일종의 escalation ladder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어떠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를 전제로 구성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상 북한이 선택할 정책대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전쟁을 감행할 경우 최종결과가 북한체제의 종말이라고 판단

할 경우, 북한은 전면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제한적 도발과 분쟁을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초반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가 가지는 용도는 파괴가 아니라 확전을 방지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협상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즉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당한 피해를 준 이후 협상을 통한 종결을 추구할 경우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제일차적인 전략목표에 포함되어 초기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공격을 받기 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마. 북한의 핵 선제 사용(first strike) 가능성

이러한 판단과 상황 설정은 두 번째 경우를 설정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체제붕괴를 무릎 쓰고라도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이다.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고 할 경우, 북한은 초기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주요 전략목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미국은 전쟁발발과 함께 즉각적으로 북한의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요한 전략자산을 잃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과거 소련과 미국의

I
II
III
IV
V
VI

군비경쟁 속에서 고려되어 왔던 소련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북한의 대응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적 자산이 그리 많지 않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2차적으로 대응공격을 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논리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도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자제하기 보다는 초기에 사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요컨대, 북한은 나름대로 **first strike**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second strike**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나, 전략무기 즉 대량살상무기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first strike**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전을 감행하고 순차적인 대응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안전과 안보에는 중대한 도전이 발생하는 것이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에게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선택에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선택을 제약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상황적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가기보다는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되,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보정책을 수정하고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spectrum)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등의 비군사분야에서의 조치도 요구된다. 즉 군사적 조치이외에도 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4. 국제관계

### 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

북한의 핵 보유는 핵확산 및 비확산문제에 대한 도전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1970년대부터 형성된 국제 핵비확산(non-proliferation)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1969년 6월 12일 출범한 국제 핵비확산체제(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보유 5개국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회원국은 핵무기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NPT는 1968년 7월 1일 유엔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각국 간 핵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핵 군비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고 기존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67</sup>

---

<sup>167</sup> NPT는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제1조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나 그에 대한 관리를 이양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 획득, 관리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제2조에 따르면 비핵국가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나 그에 대한 관리를 이양 받지 않고,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되어 있다.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다만 제6조에서 핵군비경쟁 조기 중지와 핵군비 축소에 관한 조치 및 군축 조약에 관한 협상을 점진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NPT체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이란, 미얀마 등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핵무장을 촉발시켜서 군사적 긴장의 증폭과 함께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이 비등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더욱이 이들 불량국가가 핵물질을 테러집단에게 매도하면 많은 국가들이 핵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는 위협이 커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당장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고 북한 핵무기·기술이 중동국가 및 테러리스트집단에게 넘어가게 되면, 미국 주도의 국제 핵질서는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동국가들의 핵무장으로 중동지역의 세력균형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 본토가 핵 테러를 당하는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동북아 지역질서 및 한반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미국 본토방위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개발·보유가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 부시행정부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묵인, 미국과 인도,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핵관련 협력은 미국주도의 NPT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례이다. 1998년 인도 핵실험을 비난하며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부시행정부 시절 중국 견제 목적으로 인도에게 원자력 협력을 승인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시행정부는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파키스탄과 군사적 핵협력을 추진하였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으나,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행위를 승인해 주었던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모두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핵비확산체제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이다.<sup>168</sup>



## 나. 동북아 안보불안 심화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파괴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차원에서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약화시켜 인류의 핵안전을 위협하게 되며, 동북아 차원에서도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지역 전체에 새로운 핵무기 개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안정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반도 및 태평양지역에 병력을 증강시키면, 중국도 군비증강 속도를 배가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안보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위기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가능성 증가로 귀결된다.<sup>169</sup>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무산됨을 의미하며, 북한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의 불사용 원칙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반도 전체가 핵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일본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 보유는 미·북 간의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sup>168</sup>.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43~45.

<sup>169</sup>. Shi Yinhong, "China, the North Korea Problem and the Korean Peninsular: Protracted Predicaments with Strategic Stamina," 『2010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9).

이는 또 다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개입을 야기시켜 그야말로 한반도는 주변 국가들의 각축장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이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패권 향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여부에 의하여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전제의 일환으로 북한 핵문제를 활용할 경우 북한 핵문제는 미·북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는 동북아 최대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시아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커다란 안보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 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 개입

북한 경제난, 후계체제의 불안정성, 국제적 압력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중봉기, 군부쿠데타, 내전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하여 북한은 통제 불능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직면하면 미국은 우선 북한 붕괴가 주변국의 개입을 야기하여 한반도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붕괴로 인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북한정부의 통제, 관리 및 안전조치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심각한 안보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중앙 통제능력이 상실되어 제3국 및 테러집단으로 밀반출될 위험성이 증가하여 미국의 본토 방위가 위협에 처하거나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내전 과정 또는 대남 도발로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군사적 수단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개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취한다면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사태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북 군사개입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추정된다.<sup>170</sup>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가이익이 지정학적 안보 및 국경의 안정, 강대국 지위 유지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등으로 판단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세력균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 나가되,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진적 현상타파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급진적 한반도 현상타파전략을 수행한다면, 현재의 대립과 협력이 교차하고 있는 미·중 관계는 급속하게 패권갈등 관계로 전환되고, 사태 발전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전쟁도 발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붕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상태가 미국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할지라도 미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북 군사 개입을 실행에 옮기되, 이러한 군사 개입이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국과 사전에 협의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에 주변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를 북한내부 문제로 규정하고 가능한 한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지만, 한·미 연합군 또는 한국군 단독 개입이 이루어지고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자국의 국익이 손상 받을

<sup>170</sup>-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

I
II
III
IV
V
VI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붕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한 북한체제 붕괴로 한·미 주도의 통일한국이 급속히 실현될 경우,<sup>171</sup>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미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sup>172</sup> 만일 북한붕괴로 한반도 통일이 한·미동맹에 의하여 주도되고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통일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상실하여 미국과 국경선을 마주보고 직접 대치하게 됨으로써 중국 안보이익이 지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인식한다.<sup>173</sup> 이외에도 북한이 북한붕괴로 붕괴되어 한국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동북3성 지역의 약 200만여 명의 조선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보다 통일한국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중국 내 소수민족 분리운동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백두산 경계 문제,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등 북한붕괴로 인한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국익에 심대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171-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되 반드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① 자국의 경제건설을 저해하지 않는 통일, ② 외세의 개입이 없는 통일, ③ 통일국가가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문홍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39집 2호 (1999.12) pp. 75~76.

172- 최춘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10.

173- Defence Talk, “North Korean collapse a nightmare scenario for China: analysts,” <<http://www.defencetalk.com/north-korean-collapse-a-nightmare-scenario-for-china-a...>> (검색일: 2010.6.21).

## IV. 미국과 중국의 대응과 국제 핵질서의 변화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 핵질서에도 어려운 도전을 제기한다. 여기서는 핵 보유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최근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국제 핵질서의 변화가 북한 핵문제에 제기하는 함의를 서술한다.

## 1. 미국의 대응

### 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정책의 최종목표는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핵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 협상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수취하면서 협상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 자신의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패턴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sup>174</sup> 게이츠 국방장관 역시 오바마 정부는 동일한 “말을 세 번이나 사지 않겠다”<sup>175</sup>고

<sup>174</sup>.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Acceptance of the Nobel Peace Priz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Dec. 10,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acceptance-nobel-peace-prize>> (검색일: 2010.11.15).

<sup>175</sup>. David E. Sanger, “U.S. Weighs Intercepting North Korean Shipments,”

I
II
III
IV
V
VI

강조했다. 데이비드 싱어 뉴욕타임즈 기자는 2009년 8월 9일 “오바마의 참모들 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기술을 수출하여 돈을 벌고 힘을 기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sup>176</sup>하고 언급하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북핵 폐기를 대가로 정치·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는 포괄적 패키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패키지 구상은 2005년 6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CVID 원칙 아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강인하고 직접적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13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경제적인 필요사항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sup>177</sup>고 밝혔다. 2009년 아시아순방 당시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은 핵비확산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 회담 의제로 포함시켜 핵, 미사일, 북한 인권, 납치자 문제, 평화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캠벨 동아태 차관보 역시 2009년 7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

---

*The New York Times*, Jun. 7, 2009.

<sup>176</sup>- David E. Sanger, “Coming to Terms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Aug. 8, 2009.

<sup>177</sup>- 클린턴 “북핵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 『연합뉴스』, 2009년 2월 14일.



조하면서 “북한이 핵 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sup>178</sup>

미국의 이러한 북한 핵정책이 구체화되기 전,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에 이어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 중심의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단행하자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의장성명을 4월 13일 채택하였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북한은 6자회담 불참, 기존 6자회담 합의사항 폐기 등의 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 핵전문가 및 IAEA 요원을 추방하고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6월 12일 15개국 이사회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문 발표 후 북한은 6월 13일 핵보유국 지위 주장을 하면서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플루토늄의 전략 무기화, 해상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결의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북한의 핵물질 및 핵개발계획의 해외유출시 군사조치 검토,

178. 이우탁·김승욱, “캠벨” 北, 불가역조치시 포괄적 패키지, 『연합뉴스』, 2009년 7월 19일.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을 언급하였다.<sup>179</sup> 특히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물질 및 핵프로그램 등을 불량국가, 테러집단 등에게 매매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시리아, 미얀마, 이란 등과의 핵프로그램 협력 등에 대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조치를 취할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sup>180</sup>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미국 정부는 단호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 및 독자적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을 6자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2009년 7월 20일 한국 방문 시 북한이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국과 함께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북한은 포괄적 패키지 제공의 전제로 내세운 ‘비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부시행정부에서 나왔던 CVID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다만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실천한다면 미국과의 대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sup>181</sup> 미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행하자,<sup>182</sup>

---

<sup>179</sup> 확장억제 개념은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해 한·미안보 협의회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이 개념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더해 2002년 NPR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이들 3대 전략무기에다 미사일방어와 초정밀타격 체제를 더했다. 월터 사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009년 6월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확장억제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면서, 또 MD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남한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면서 유사시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에 따라 전술핵무기 또는 관련 수단을 한국에 전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sup>180</sup>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 5, 2010).

북한은 핵 강화와 대화 병행전략으로 응수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외의 별도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부시행정부는 핵확산 금지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리아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 건설에 협력했다. 이는 2007년 9월 이스라엘에 시리아 폭격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과거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레드라인은 단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결론부분에 기술된 것으로서 비국가에 의한 핵테러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NPT체제 밖에 있으면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의심을 받아서 미국의 1차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sup>183</sup>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되 공식 외교석상에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 국방부 합동군사령부(JFCOM)와 국가정보위원회(NIC) 등의 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2010년 4월 11일(현지시간) ABC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나라로 분류했다.<sup>184</sup>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6일 발표된 핵태세 검토

181. 최선영, “北 ‘포괄적 패키지’론에 일단 부정적 반응,” 『연합뉴스』, 2009년 7월 23일.

182. 보즈워스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방안 및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안 등에 대한 6자 회담 참가국간 협의의 목적으로 2009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는 현 접근방식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효동·조준형, 보즈워스, “北근본변화 없어..다자해결 필요,” 『연합뉴스』, 2009년 9월 6일.

183. Charles L. Pritchard, John H. Tilelli Jr. and Chairs Scott A. Snyde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p. 8.

184. 김영석, “미국의 대북 핵 정책 투트랙 전략,” 『쿠기뉴스』, 2010년 4월 11일.

보고서(NPR)에서 핵공격 배제 대상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킨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공식적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경우 북한이 북·미 양자 회담과 6자회담 등에서 핵군축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 핵무기 보유에 상응하는 군사 작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맞춰 각종 정책을 수립하되 국제외교적 측면에선 핵보유국 불인정 정책을 고수하는 이중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

천안함 침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책을 재확인 해주었다. 미국의 정책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원칙에 잘 나타난다. 전략적 인내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미국 여기자 역류, 천안함 침몰 등의 일련의 도발적 사건을 일으켰지만, 미국은 경제제제, 군사적 억제 등의 제반조치를 통하여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가역적인 핵 폐기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85</sup> 그리고 천안함 사태

<sup>185</sup> “U.S.: Time for Strategic Patience with NKorea,” *The Associated Press*, Dec. 11, 2009.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천안함 사건 이후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시에도 언급한 적이 있다. Glenn Kessler, “Analysis: North Korea tests U.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he Washington Post*, May 26, 2010;

이후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즉, 천안함 사태로 약화된 대북 재래식 억제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이행을 감시하면서 자체 대북 금융제재안을 모색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해외 불법 자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5년 북한 계좌가 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사례를 대북 압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서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합동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약화된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정권 교체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05~200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2010년 5월 미 국방부의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레고리 숄티는 19일 북한과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인 위신과 영향력, 안보 등이 국제사회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및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

---

Emma Chanlett-Avery and Mi Ae Taylor,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p. 4;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는 2010년 4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시립대 콜린 파월 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한 ‘한국통일, 지역평화와 2010년대’ 세미나에 참석해 천안함 사태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다자간 개입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24일.

I
II
III
IV
V
VI

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과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여 주는 핵협상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186</sup>

북한의 정권 교체를 도모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대북강경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중국에 대한 강한 안보적 압력을 부가하거나, 비확산(nonproliferation)이 아니라 부시 정부 초기처럼 군사행동을 상정하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sup>187</sup>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참여 없이 북한 핵에 반대하는 연합(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을 구성하여 평양을 지원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고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초현대식 무기를 일본, 한국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가 자국의 화평굴기 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대북 문제 해법으로 채택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선 북한 정권 교체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정책적 주안을 두고 있는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목적으로 현재 북한 지도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체제전복 행위를 지원하고,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 출입 선박들의 입출입을 금지시키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

---

<sup>186</sup>- 박상현, “북핵문제 해결위해 북정권교체 유도해야,” 『연합뉴스』, 2010년 6월 20일.

<sup>187</sup>- Jamie M. Fly and Daniel Halper, “Rethinking North Korea policy,” <<http://www.dyn.politico.com/printstory.cfm?uuid>> (검색일: 2010.6.22).

되어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 갈등이 제고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익은 손상 받을 수 있다.<sup>188</sup>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개입위주정책을 취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한 공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sup>189</sup>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데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2. 중국의 대응

### 가. 후진타오 집권 2기의 대북정책

여기서는 중국공산당 제16기 6중전회가 개최되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부터를 후진타오 집권 2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이라는 넘어서는 안 될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자, 중국은 이전에 비해 강력한 톤으로 북한의 핵무기 실험

<sup>188</sup>- Pritchard, Tilelli Jr. and Snyde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 17

<sup>189</sup>- *Ibid.*, p. 18.

I
II
III
IV
V
VI

을 비난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을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비난하고 ‘견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북관계가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공표하였다.<sup>190</sup> 북한이 도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에 무조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수단과 같은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면서 북한에게는 핵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한·미·일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는 북한의 붕괴 방지, 즉 남북한 ‘2개 한국’의 안정적 공존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이 두 번째로 강조한 점은 북한 핵 위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조성되자, 중국은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화 기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

---

<sup>190</sup>- 홍인표, [북 핵실험 강행] 中 “北 제멋대로 美 국제사회 대한 도발,” 『경향신문』, 2006년 10월 9일; 조운찬, “중국의 ‘역할론’ … 北 대화재계 유일 창구,” 『경향신문』, 2009년 5월 27일.



하다는 점에 찬동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지지표를 행사하였다. 물론 일본과 미국주도하에 상정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안 초안의 강도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기는 했지만, 국제무대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에 중국이 지지표를 행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sup>191</sup> 과도한 제재조치는 북한을 자극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도록 할 것으로 우려하였고, 북한에게는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후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점을 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후 전개된 제재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조기에 전환되도록 외교노력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탕자쉬안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일로부터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힐 미국 6자회담 대표를 베이징에 불러 미·북·중 3자 간 비공개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2006년 12월 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최되었고, 2007년 1월 미·북 베를린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핵 폐기 초기 이행조치가 담긴 2.13합의가 타결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에도 중국은 1874호 대북 제재결의안에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강도 높은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경제 원조를 계속하고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sup>191</sup>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인책이 되어야 하며, 대북 제재조치의 강도가 적절하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약화시켰다. “2006年10月24日外交部發言人劉建超在例行記者會上答記者問,”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77291.htm>> (검색일: 2006.10.25).

I
II
III
IV
V
VI

를 지속시키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북핵 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이 북한 핵 위기관리에 중점 두는 정책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기간 내에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의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은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지속 주둔의 명분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 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바라지 않고 북한 핵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sup>192</sup> 따라서 중국도 북한 핵문제와 중·북관계를 분리시켜 다루기 시작하고,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였다.

세 번째로, 중국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만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는 원인을 북한의 국내 정치·경제문제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한 한·미의 안보위협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중국은 현재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까지 강행한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무시정책과 한국의 대북 강경정

---

<sup>192</sup> 李開盛, “美韓正在推動朝鮮崩壞?”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80489>> (검색일: 2010.6.28); 鄭永年, “朝鮮問題與中美關係,”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00622.shtml](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00622.shtml)> (검색일: 2010.6.22).

책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의거하여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중국이 6자회담 내에 비핵화 워킹그룹과 함께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워킹그룹, 동북아 평화체제 워킹그룹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한 것도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해 주면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여 비핵화 조치 이행에 진전된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조치 완화와 평화협정 논의 제의를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sup>193</sup> 중국은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한·미·일의 대북 제재 지속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북 제재조치 완화·해제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조심스런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도한 제재는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초래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6자회담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회담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한·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내심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sup>194</sup>

<sup>193</sup> 인교준·홍제성, “북·중,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논의,” 『연합뉴스』, 2010년 2월 10일; 장예쑤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결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조치를 잠정 중단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就安理會第1874号決議, 中國常駐聯合國代表張業遂向媒体發表談話,” <[http://www.hndaily.com.cn/html/2009-06/14/content\\_135212.htm](http://www.hndaily.com.cn/html/2009-06/14/content_135212.htm)> (검색일: 2010.3.31).

I
II
III
IV
V
VI

2009년 북한이 2차 미사일 위기를 조성하고 2차 핵 실험을 실시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정부의 급진적 대북정책 전환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구상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밝히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도 중국의 이러한 의혹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경제 격차의 심화 그리고 한국의 대북 체제전복 의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목표로 전략되었다. 물론 중국도 여전히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걷는 데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 간 군사적 대치국면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일에 대한 미국의 동맹정책을 강화시키고, 미국에게 역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일·대만에게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동북진흥계획’의 성공여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무

---

<sup>194</sup> 이러한 입장은 時永明, “恢復六方會談無須先決條件,” 『北京周報』, 第6期 (2010.2)에 잘 나타나 있다.

기 개발에도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후 중국은 ‘책임 강대국’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 핵 폐기보다는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 악화를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 나.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

향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고수정책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가는 다음 네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중 간 정치·군사적 불신이다. 둘째,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이다. 셋째, 북한 김정일정권 지속 여부와 후계체제의 안정성문제이다. 넷째, 중국 지도부의 전략판단과 중국 내 여론 동향이다.

후진타오 집권 2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 보유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 무장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환경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잘못된 행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독자적 외교 노력을 적극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안정유지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북한에게 적절한 안보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 해소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 (1) 한반도 안정유지와 북핵 위기관리

중국은 2050년까지 경제발전을 통해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국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가정책 목표와 대외정책 방침에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sup>195</sup> 따라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핵탄두 숫자를 늘리고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이를 자국의 국가 전략 목표와 대외정책 방침에 배치되는 행보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고수정책이 동북지역 경제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할 것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있고, 2009년부터서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곳으로 북한, 러시아와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고수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경제교류협력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며, 북한을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

<sup>195</sup>- “溫家宝在十一屆人大三次會議上所作政府工作報告,” <[http://www.gov.cn/2010/1h/content\\_1555767.htm](http://www.gov.cn/2010/1h/content_1555767.htm)> (검색일: 2010.3.15).

가 곤란해진다는 이야기다.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를 불안해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화가 중국에 미칠 정치·사회적 파급영향도 중국이 감내하기에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 핵사태가 악화되면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 영내로 피난을 시도할 것이다. 일시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피난행렬이 중국으로 진입할 경우, 중국 동북지역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군사적 요인 때문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고수정책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하에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과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은 한반도 사태에 어떤 형식과 절차로든 개입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미·중관계를 군사적으로 더욱 긴장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도광양회’ 전략 아래 미국과 대결하지 않고 협력을 지향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이익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2010년 6월 이후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참가 아래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계획에 대해 중국이 보여 준 강력한 반대 입장과 대응행동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sup>196</sup>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를 경우, 천안함사건에 따른 미국의 강경대응 수위보다 더 강력한 대응조치가 북한에 대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은 우려할 것이다. 한·

196. “社論：黃海挑釁將是美國戰略失策,”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07/906175.html>> (검색일: 2010.7.6).

미 등 외부세력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제공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연루 가능성에 중국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면 중국 동북지역이 그 직접적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북한 핵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 3차에 걸친 북한 핵 위기와 천안함사건이 중국에게 가져다 준 교훈 중의 하나는 북한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한·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책임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과도한 압박과 제재조치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한·미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중국과 한·미와의 관계가 크게 경색될 것이다.<sup>197</sup>

결국, 중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제한적인 제재수단과 외교적 중재를 통해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중국에게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진퇴양난의 어려운 선택을 제기할 것이다.

---

197. 북한 핵문제로 인해 중국이 처하게 될 상황은 천안함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한·중관계는 경색되었으며, 중국은 한·미의 요구와는 달리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보를 보였다. Choe Sang-Hun, “China Gains Influence in Korean Affairs as North and South Warily Seek Its Help,” <<http://www.nytimes.com/2010/04/29/world/asia/29korea.html>> (검색일: 2010.4.29); 鄭永年, “朝鮮問題要通過大談判來解決,”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00608.shtml](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00608.shtml)> (검색일: 2010.6.8).



중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초래될 북한의 위협과 북한과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안정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정책을 저지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지만, 북한의 혼란과 붕괴가 가져 올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비하는데 중국은 일차적 정책비중을 둘 것이다.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구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과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한·미의 ‘선 천안함사건 처리, 후 6자회담 재개’ 입장 때문에 현재는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지만,<sup>198</sup> 중국정부는 자신이 주도해 온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대북 및 대한·미에 대한 외교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기존의 천안함사건과 6자회담 분리입장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 주장을 한·미와 북한에게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입장과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균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계속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한다면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이후에 보여준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북한이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여 수소폭탄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중국 관방매체는 빠른 시일 내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 고수정

<sup>198</sup>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선 천안함사건 처리, 후 6자회담 개최’ 주장 목적은 6자회담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데 있다고 인식한다. 張智新, “金正日訪華後的東北亞局勢,” <[http://www.zaobao.com/yl/tx100511\\_002.shtml](http://www.zaobao.com/yl/tx100511_002.shtml)> (검색일: 2010.5.11).

I
II
III
IV
V
VI

책을 취할 경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sup>199</sup>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안보위협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이 정권안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의식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게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는 동시에, 북한 핵 사태가 심화될수록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한·미에게 강조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조약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이 핵 무장력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무력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중·북 동맹조약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또 다른 전략적 목적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데에도 있다. 2010년 4월 미국이 새로운 핵태세검토(NPR)보고서를 공개하여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 불사용을 약속했으나,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이 약속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sup>200</sup>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사태 발생은 안보에 사활적인 것이므로 중·북 동맹조약을 전략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주도의 ‘과도한’ 제재조치에는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중

---

<sup>199</sup>- “朝鮮莫在核鋼絲上跳舞,”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05/814569.html>> (검색일: 2010.5.14).

<sup>200</sup>- 이상현, “미국 2010 핵태세검토(NPR)보고서: 내용과 함의,” 『정세와 정책』, No. 179 (2010), <[http://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79.pdf](http://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79.pdf)> (검색일: 2010.7.4).

국은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불신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북한을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위협을 막아주는 방파제로 인식하여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의 경우처럼 안보리의 북핵 제재결의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재결의안에 지지표를 행사할 것이지만, 실제 제재조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북 설득의 교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외교담당 국무위원급의 비중 있는 인사를 당 총서기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고 적절한 규모의 원조 제공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원조 제공은 북한의 행동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강화에 따른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미가 북한 핵문제를 구실로 북한 체제변화를 시도하려는 데에도 중국은 협력하지 않고 저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미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화재개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sup>201</sup>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 군대가 개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려한

<sup>201</sup> 時殷弘, “非傳統安全與中美反擴散博亦,”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10), pp. 1~7; 2003~2005년 기간 동안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에 재직했던 미첼 라이스는 전략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상정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봉쇄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itchell B. Reiss, “Hard Containment,” *The American Interest*, Vol. 5, No. 3 (Winter 2010), pp. 75~77.

I
II
III
IV
V
VI

다.<sup>202</sup> 그러나 한·미의 판단과 달리 중국 지도부와 중국의 ‘전통파’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2~3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가 죽더라도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 무장력 강화정책을 지속하더라도 한·미와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sup>203</sup> 한·미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한·미와 북한급변사태 논의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 핵 사태에 직면하여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정책대안의 하나는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파급영향을 차단하고 가능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영토가 협소한 북한이 핵탄두 성능을 강화하고 소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중국 동북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중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북한에게 조심스런 행동을 주문할 것이다.<sup>204</sup> 그리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서해상을 향해 실시될 경우 중국에게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202\_ 李開盛, “美韓正在推動朝鮮崩壞?”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80489>> (검색일: 2010.6.28).

203\_ 중국 외교부 관리들은 1) 북한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2)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북한 붕괴 대비계획을 중국이 한·미와 협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3)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07년 한국에게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협의하자는 제의를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바도 있었다. 중국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당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정책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08년 2월 베이징에서 전직 중국외교관과의 인터뷰.

204\_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견해는 張璉瑰, “現實開始爲大家上課,” 『世界知識』, 第12期 (2009), pp. 14~20에 잘 표현되어 있다.

과 일본을 자극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해상을 향해서 보다는 동해상을 향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 (2) 대북 영향력 유지 및 점진적 변화 유도

북한이 2차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여 핵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기도를 감행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구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동양식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이 국제고립과 경제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격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한·미의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3월 김계관의 뉴욕발언과 2009년 10월 리근 북한 북미국장의 발언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미·중 간 경쟁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편을 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발생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일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경제 위상과 국제정치 지위가 날로 신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미국은 패권지위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에게 'G2' 지위를 제안하면서 국제문제 해결의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sup>205</sup> 2010년에 들어 오바마 미국정부가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에

<sup>205</sup> 陳向陽, “透視中國的大國責任,” 『瞭望』, 第9期 (2010), p. 93; 肖洋, 柳思思, “論有償推車戰略與中美合作,” 『現代國際關係』, 第12期 (2009), pp. 7~12; 賀凱, “中美關係應避免期望落差,” <[http://www.zaobao.com/yl/yl1100512\\_002.shtml](http://www.zaobao.com/yl/yl1100512_002.shtml)> (검색일: 2010.5.12); Elizabeth Economy, “Leadership Gap in China,” *The Washington Post*, Dec. 1, 2008.

달하는 첨단무기 판매계획을 밝히고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면담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sup>206</sup>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포위정책’을 전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2010년 6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을 불허했다.<sup>207</sup>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의구심을 가질수록, 중국은 북한 핵 위기 악화 이후 북한의 대미 접근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대중 안보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전략적 완충지’로 간주하고, 북한을 포기하는 정책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08</sup> 북한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런민대학의 스인홍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와 중·북관계를 분리하여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북한문제를 이란문제 보다도 더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북한체제 붕괴 또는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한다.<sup>209</sup>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부를 만났

206\_ 鄭永年, “中美關係怎麼了?,” <[http://www.zaobao.com/y1/y1100209\\_008.shtml](http://www.zaobao.com/y1/y1100209_008.shtml)> (검색일: 2010.2.9).

207\_ 忘言, “中美軍事交流梗阻內幕,”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80455>> (검색일: 2010.6.27).

208\_ 周慧來, “中國放棄朝鮮選為時尚早,” <[http://www.zaobao.com/y1/tx100615\\_001.shtml](http://www.zaobao.com/y1/tx100615_001.shtml)> (검색일: 2010.6.15).

209\_ 時殷弘, “非傳統安全與中美反擴散博亦,”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10), pp. 1~7.

을 때,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전략적 소통채널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여 김정일의 수락을 얻어냈다. 중국이 북한에게 중대한 외교문제와 내정문제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제의를 하게 된 이유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북한의 행보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묶어두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를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구도 내에서 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10</sup>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더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 핵 이후의 상황전개 과정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2월 북한 김영일 총리 방중과 5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암록강대교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연내 교량 건설 공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 중국 전국인대 회의 시 중국은 북한 나진항 개발권과 사용권을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의 진출로를 중국이 확보한 것이다.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 기업인의 북한 투자 의욕이 살아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대북 경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려 할 것이다.

<sup>210</sup>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뉴욕에서 NPT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날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張璉瑰, “金正日訪華: 一次令人關注的外交行動,” 『世界知識』, 第11期 (2010), pp. 21~25.

I
II
III
IV
V
VI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여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점진적 개혁·개방을 계속 설득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주문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북한문제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북한에게 적극 주문할 것이다. 2010년 5월 6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 발언도 이러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직접화법을 동원하여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sup>211</sup>

### 3. 새로운 국제 핵질서와 북한

최근 국제적으로 핵질서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 핵질서 변화의 동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 전략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핵질서 변동의 중심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있다. 대선 때부터 오바마 후보는 핵테러와 핵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주창했다. 취임 후에도 그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2010년에는 미 행정부의 주도 아래 국제 핵질서를 규율하는 네 가지 중요한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2010년 4월 6일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검

---

<sup>211</sup>- 2010년 5월 중·북 정상회담 중국 측 보도문은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military.people.com.cn/GB/172467/11543524.html>> (검색일: 2010.5.7); 북한 측 보도문은 『로동신문』, 2010년 5월 8일.



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를 발표하고 새로운 핵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4월 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코의 프라하에서 1991년에 체결된 START I을 대체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체결했다. 4월 12~13일에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개최되어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월 3~28일에는 뉴욕에서 제8차 NPT 평가회의가 열려서 지난 5년간의 조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한 것은 물론 최종문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는 네 가지 합의 중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NPR과 8차 NPT 평가회의를 다룬다.

## 가. 오바마 행정부의 NPR

오바마 행정부가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지난 4월 6일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sup>212</sup> 새로운 NPR은 앞으로 5~10년간 미국의 핵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 해결 등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처럼 국가 간의 핵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핵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면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sup>212</sup>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Apr. 2010).

I
II
III
IV
V
VI

이번에 발표된 NPR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새로운 핵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1) 핵확산과 핵테러를 예방한다, 2)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인다, 3) 핵전력을 감축하면서 전략적 억제와 안정을 유지한다, 4) 지역차원의 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킨다, 5) 안전하고 잘 보관된 효과적인 핵전력을 유지한다. 핵테러 예방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핵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북한 핵문제 및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두 번째 목표, 즉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부분이다. NPR은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fundamental role)’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존의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개정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강화된 새로운 NSA 정책을 천명했다.<sup>213</sup>

미국은 NPT에 가입해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의 NPR이 천명한 새로운 NSA에서는 핵보복의 여지를 남겨둔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비핵국가가 NPT에 가입해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화학·세균무기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핵으로 보복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즉,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무조건 핵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북한이 NPT에

---

<sup>213</sup>- NPR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weapons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NPT and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Ibid.*, p. viii.

복귀하고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복 불가(不可)’라는 새로운 정책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밀러(James Miller) 국방부 수석부차관보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의 하나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sup>214</sup> 물론 새로운 정책이 현재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핵확산을 계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모든 수단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NSA는 미국의 핵위협을 거론하며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핵비확산 체제의 ‘이탈국가(outlier)’를 겨냥해서 이들의 핵개발 명분을 제거하고 NPT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와 비교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는 이탈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핵비확산 체제에서 떨어져나간 국가라는 뜻임과 동시에 다시 이 체제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약하면, 오바마의 새로운 NSA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핵위협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

<sup>214</sup> DOD's Nuclear Posture Review Rollout Briefing (Washington D.C., Apr. 7, 2010), p. 14, <[http://www.defense.gov/npr/docs/FPC%20\\_4-7-10\\_%20Nuclear%20Posture%20Review.pdf](http://www.defense.gov/npr/docs/FPC%20_4-7-10_%20Nuclear%20Posture%20Review.pdf)> (검색일: 2010.11.15).

I
II
III
IV
V
VI

## 나. 8차 NPT 평가회의

NPT는 1970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국들이 모여서 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실천하는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RevCon)’를 개최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핵국과 비핵국, 서방선진국과 비동맹국 등 각국의 실정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고 진솔하게 교환되는 대화의 마당으로 그 위상을 굳혀왔다. 제8차 NPT 평가회의가 금년 5월 3~28일 뉴욕에서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최종문서(Final Document)’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최종문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최종문서 이행상황 검토 부분에서 비핵국의 안전 분야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 핵개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sup>215</sup>

평가회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이 동북아와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며, 지구적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한다.

둘째, 최종문서 이행상황 검토 부분의 핵비확산 분야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했다.<sup>216</sup>

제8차 평가회의는 북한이 2006, 2009년에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 평가회의는 모든 적절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핵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

---

<sup>215</sup>- Draft Final Document,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2010/L.2, May 27, 2010, p. 14.

<sup>216</sup>- *Ibid.*, p. 3.

셋째, 최종문서 향후 행동계획 부분의 중동비핵지대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up>217</sup>

평가회의는 북한이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6자회담에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NPT 복귀하고 IAEA 보장조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 북한과 모든 국가들이 관련 핵비확산 및 군축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회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관련 문제의 만족스럽고 포괄적인 해결을 이루고자 한다.

제8차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핵문제를 보는 189개 회원국의 공통된 입장을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지를 모았다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향후 해결방향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결과가 핵을 유지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가회의의 결의사항이 북핵문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악화되었고, 북한 정권의 핵보유 결심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이다. 평가회의의 최종문서는 법적인 강제성을 갖는 문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또한, 북한은 이미 NPT에서 탈퇴한 국가로서 NPT 평가회의의 합의사항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218</sup>

<sup>217</sup> *Ibid.*, p. 28.

<sup>218</sup>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제8차 NPT 평가회의의 관련 발언, 『조선중앙통신』,

I
II
III
IV
V
VI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하여 시비하는 견해들이 일부 표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조약밖에 있는 나라로서 그에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핵무기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 전에도 조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조약위반행위는 오직 핵무기보유국들의 핵군축의무가 규제된 제6조에서만 발생하였다.

---

2010년 5월 24일.

# V.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기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 고수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서술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측면이다. 남북관계의 전망과 관련한 주요 변수를 일람하고, 한국의 선택과 대책을 알아본다. 둘째, 외교정책의 측면, 셋째, 안보정책의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 1. 대북정책 측면

### 가. 전망과 주요 변수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의 핵심 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 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경로를 거듭해서 외부에 표명해 온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핵보유국으로 가는 자신의 경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향후 북핵 문제로 더욱 강경해지게 될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의 대북한 경제 제재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스케줄을 쉽게 단념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핵 보유 계획과 그것의 실행으로 인해 가해질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심화되어도 핵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고수는 현재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대단히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미래비전, 추진 원칙, 추진 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I
II
III
IV
V
VI

한반도의 ‘미래와 비전’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서 시작하여 한반도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로 진화(進化)해 가는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의 경우, 원칙과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과정은 현실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추진 과제’의 경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 의제를 수차례 제시해 왔는데, ‘비핵·개방·3000’,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등이 그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한다면 이러한 북핵이라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재고되거나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에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관계의 산물로 인식되어 와서 양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한국은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에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핵문제가 회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왔다.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 특히 미·북 간에서 논의되는 의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한국의 대북정책과의 연계 고리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리면 착수되게 되는 ‘비핵·개방·3000’과 북한 핵문제를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랜드 바겐’은 현재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확하게 봉착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지지하고 노력해 왔다. 현재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대북정책의 원칙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기조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 한반도 문제와 국제 문제의 조화와 동일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편으로는 현 시기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북핵 문제는 미·북 간의 의제로 인식되어 해석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북 압박을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 개최된 핵태세보고서(NPR) 및 핵안보정상회의 등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심층적으로 동참하여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실천 중에 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이 선두에 섬으로써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압박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이 핵 보유를 명백히 하고, 반개혁 정책을 고수할 경우 사실상 한국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고 반개혁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의 대북

I
II
III
IV
V
VI

정책은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한 정책 노력에 있어서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며, 북핵 폐기의 결단과 폐기 완료에 이르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뿐 아니라 반개혁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의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북한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고 반개혁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설정 가능한 어떠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 (1) 변수 1: 6자 회담의 기능 정지와 대북 압박의 강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게 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가동되었던 6자회담은 그 기능을 사실상 정지할 수 있다. 이미, 오히려 6자회담이 북한의 핵 보유를 자극하고 용인하는 다자적 틀이었다는 비난이 등장해 있으며, 일부에서는 6자회담의 포기를 주장한다. 6자 회담의 기능이 정지되고 본격적으로 해체된다면 향후 북핵 문제를 아젠다로서 언급하거나 해결을 추구할 더 이상의 다자적 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정세 판단 아래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처 노력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고 우선순위로 대북정책을 실행 해왔던 한국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제기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은 기존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협력적 국제 공조가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개별 국가가 북한에 비핵화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공조 형태의 대북 압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자적 틀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북한 관계를 진행시켰을 때 해당 개별 국가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 위주로 가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대북 접촉 혹은 압박은 종국적으로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경쟁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북 압박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대북 지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 제고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 목표가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 고수라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향후 남북한 사이를 중재하고 연계할 네트워크가 사라짐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서로 간에 부정적인 정책이든 긍정적인 정책이든 간에 매우 직접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실천해야만 하는 관계로 변화할 것이며, 아니면 조금의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 (2) 변수 2: 한국의 핵 보유 및 미국의 핵우산 도입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고 그 상황을 고착시키게 된다면, 결국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국제적 경향에 따라 한국의 핵 보유 및 핵우산 도입이 예상될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이럴 경우, 일본의 핵 보유와 그로 인한 중국의 핵 체계 강화, 이어서 대만의 핵 보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핵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라는 공포가 등장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이는 남북한 관계에 남북 대결의 경향을 극대화시키게 되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결과 갈등의 요소들은 북한의 핵 보유 고수로 인한 한국의 정치권의 요구뿐만 아니라 여론에서의 반응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3) 변수 3: 남북 경협 및 남북 교류의 전면적 중단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할 경우,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과 남북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핵보유국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그 자체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게 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중단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남북경협과 교류의 전면적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해 왔던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남북교류의 중단은 남북한 관계를 소통과 대화의 채널이 전무한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급기야 개성공단도 그 가동이 완전히 중지되어 재개를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4) 변수 4: 북·중 관계의 밀착과 한반도의 신냉전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게 되면, 중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강화되며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도 후진타오 이후 중국의 대북 목표를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 ▶대화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고수로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초기 시기에는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따라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중국의 전통적인 우려, 즉 북한의 비핵화 추구가 북한의 안정화를 해치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의 동쪽 국경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명목으로 북·중 관계가 더욱 밀착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북 압박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자극함으로써 반(反)중국 반(反)북한의 정세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 신(新)냉전 질서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남북관계는 가장 악화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한국을 둘러싼 한·미·일이 한 축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한 축이 되어 남북관계 보다는 양 진영의 형태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남북 관계는 냉전시기처럼 자체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5) 변수 5: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게 되면 북한은 다양한 급변사태(아래로 부터의 강력한 저항과 봉기, 지도부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갈등 등)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의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 고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로부터의

I
II
III
IV
V
VI

경제적 지원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며 오히려 대북한 경제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북한으로서는 경제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의 발생가능성은 최대화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인민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변수(정치적 군사적 행동)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한국에게는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가령, 북한의 권력지도부가 내부 격변에 의해서 교체된다고 했을 때 미국 및 중국이 해당 사태를 불법집단에 의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접거라는 정세로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 나. 한국의 선택과 대책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할 경우 남북 관계는 악화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한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한·중 외교의 강화, 미·중관계의 개선 추궁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소통 채널의 부재에 대한 대안적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의 폐기를 계속해서 주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명



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비핵화)하지 않고 오히려 핵 보유를 고수하는 상태에 대해 한국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북 정책에서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런 반발 없이 북한 핵의 보유를 묵인한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열세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선 경제협력의 중단 등 기존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정책은 핵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 옵션에는 크게 네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219</sup> 미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명시적인 묵인(acquiescence)이다. 둘째, 북한 핵확산의 저지와 관리(containment & management)이다. 셋째, 북핵 폐기 또는 비핵화이다. 넷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이다. 북한 핵에 대한 명시적인 묵인(옵션 1)과 레짐 체인지를 통한 비핵화(옵션 4) 보다는 옵션 2와 3이 현실에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두 번째 옵션인 관리와 핵확산 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효과적일 수 있고 부작용도 적게 나타나는 대안일 수 있겠지만, ‘관리와 핵확산 저지’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

<sup>219</sup> Pritchard, Tilelli Jr. and Snyde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를 참조.

I
II
III
IV
V
VI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와 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비핵화의 길로 되돌리는 북핵 폐기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정책 옵션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정책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하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묵인에서부터 한·미 동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 (1) 한국의 북한 핵무기의 묵인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묵인하는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 나올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 지도부가 제기했던 주장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보유국 북한을 묵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 한국은 근본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칭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자체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대안 등의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핵보유국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 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묵인은 북핵 정책과 대북 정책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NPT의 실패를 초래한 모델이 될 것이며 잠재적인 핵보유 열망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 세계적 비핵화의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프

로그래를 폐기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시도를 소홀히 한다면 핵보유국 북한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이 북한 핵보유를 허용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는 것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북한 핵에 대한 관리와 수직적 확산의 저지 (manage and contain)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북한의 핵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로 분류하여 다루는 정책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핵화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협력적인 노력이 투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핵이 더 이상 개선 및 확대(수직적 확산: **vertical proliferation**)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과 강제적 조치를 혼합하여 북한 핵능력의 수직적 확산, 즉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의 규모 증대와 기술 세련화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옵션은 한국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며,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북핵 정책에 근접한 정책 옵션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을 ‘관리와 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북한의 종국적인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금 당장은 북한 핵이 가진 위험을 감소시키고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즉각적인 ‘세 가지 저지(three nos)’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바로 1) 핵기술 수출 저지(no export of

I

II

III

IV

V

VI

nuclear technology: 일종의 수평적 확산의 저지), 2) 핵탄두 생산 저지(no more bombs), 3) 핵개량 저지(no “better” bombs)가 그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대북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북한의 더 이상의 핵개발 활동을 동결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협력과 지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발사체 개발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중국과 같은 북한의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와 협력 없이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며 비핵화로 유도하고,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북한의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한국과 함께 공유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억제와 관리는 미국의 비확산 혹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목적에 필수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관리와 억제 혹은 확산저지라는 정책 옵션은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잠정적인 옵션으로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즉, 북핵 폐기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관리와 억제는 한국에게 유익한 정책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옵션일 것이다.

하지만, 관리와 억제 전략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발사체를 개발하고 비밀리에 핵 능력을 세련화시켜 나가게 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반도의 안전은 저하되어 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관리와 억제라는 정책 옵션은 중국적으로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대한 묵인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와 억제는 유용한 잠정적인 전략은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성취하려는 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

### (3) 북한 비핵화 전략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은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비핵화의 경로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옵션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협상 대안을 제약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체의 대북 정치적 압력이 항상적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다. 북한이 만약 이러한 정책 옵션에 협력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에게 정치적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선언을 북한이 이행함으로써 경제 지원 및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옵션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지역적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핵의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삼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실현가능한 대북한 정책의 목표로 다루어야 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의 조정을 통해서 대북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또한 이러한 정책 옵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이 협력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참가국들이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참가국들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특효약으로서 수 십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유인책(에너지 지원과 경제개발 지원 등) 없이는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 추구 욕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부에 개방을 하면 대대적인 개발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 (4)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비핵화 추구

다른 아젠다와는 달리 북한 핵문제는 한·미 동맹과 대단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아젠다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가진 특수한 성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다양한 측면에서 빼앗음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정책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 한·미 관계 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부시-노무현 정부 시대의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그 때문에 북한이 한·미관계의 균열을 이용해 지렛대로 사용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특히 2009년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되었던 ‘한·미 공동비전’은 향후 양국 동맹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한·미 공동비전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실 이 선언은 이번 정부에서 한·미관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우선시하는 이 공동비전에 대해서 미국은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비전을 계승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2009년의 한·미 공동 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sup>220</sup>

하지만 한·미관계 및 동맹에서 두 나라의 대북한 정책 우선순위는 동일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상의 우선순위의 분기(分岐)는 1994년의 제네바 합의(the Agreed Framework)가 타결된 이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으로 작용해 왔었다.

한국의 대북한 정책 우선순위는 당연히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반도의 안정(stability)과 대북 포용(engagement)을 강조해 왔었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핵의 확

I
II
III
IV
V
VI

<sup>220</sup>.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뉴스한국닷컴』, 2009년 6월 17일.

산(*proliferation/ramification*)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북 정책에서의 입장 차이, 즉 한반도 안정의 필요성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2010년 미국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발간한 보고서(*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에 명시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한 바가 있다. 1) 수평적 확산 방지(타국으로의 핵 수출 저지), 2) 수직적 확산 방지(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저지), 3)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비핵화 추구, 4)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 5) 북한을 국제 사회로 통합, 6)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 등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3순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순위에서의 차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어떤 면에서는 2008년 후반에 6자회담의 붕괴로 인해 최소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취임하면서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조율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의 우선순위인 비핵화와 미국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에서의 우선순위 조율은 남북한 관계에서는 긴장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은 부시 대통령 말기와 오바마 정부하에서의 한·미관계를 결과적으로는 한층



진전시킨 것이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공동 비전은 북한에게서 이전에는 한·미 간에 입장 차이를 이용했던 북한의 지렛대를 박탈한 것이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조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엮이도록 만들었다.

### (5)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하고 비핵화 경로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과 외부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며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대대적으로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북한 지도부는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능력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을 세습하려는 김정일의 노력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확실성들과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를 고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그러한 불확실성과 위험들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북한의 불안정과 급변사태를 야기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중의 일부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 2. 외교정책 측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안보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미래문제는 구조적으로 미·중의 협력이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책은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 이외에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대응하면서, 미국 이외에 중국의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북한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할 안보정책의 정당성과 명분을 축적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북핵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여타 역내 국가는 물론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도전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ARF, EAS, ASEM 등과 같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파하고 이해와 협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추진되

고 있는 각종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하여 공감대를 확장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의 대외 협력망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킨다면 능력 확충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6자회담 무용론이나 비관론을 차단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거나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낮으나 우리 스스로 무용론과 비관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관련국들과의 협력의 기저를 약화시킬 것이므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구되며, 가능하다면 북한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13 합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5개의 실무협의그룹 설치에 합의하고 몇 차례 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본 회담에서의 진전이 없음에 따라 유명무실화되고 별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본 회담이 개최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본 회담이 개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사전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동북아 평화 및 안전에 관한 협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사전대책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6자회담과는 무관하게 동북아다자안보대화(가칭)를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굳이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I
II
III
IV
V
VI

증진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 나. 북한문제 관련 중층적 협의·협력망 구축·강화

6자회담을 넘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규모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한·미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양자차원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개최된다는 것이 한계이자 문제점이다. 관련국들 간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의 협력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장기적 대북정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은 한·미·일 3국 공조 및 협의체 도입과 가동이다. 과거 한·미·일 3국은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를 통해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해 왔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부에 들어서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그 이후 아직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악화되고 도전이 심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요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제도화된 공조는 물론 중국을 움직이고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대안이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한·중·미 3국 협의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영향력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하고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천안

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양자접촉이나 대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한·중·미라는 새로운 틀과 형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한·일·호 3국간 협의와 한·미·일·호 4자 협의도 고려해볼 만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의체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유효한 협력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을 넘어선 차원에서 외교당국자 간에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안보정책대화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양자 일변도의 협의보다는 양자, 3자, 다자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서 중층적인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사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북한, 필요시 중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압박과 설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평화안보 외교 전개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정부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너무 강경하고 호전적이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인식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의 선택 폭을 제약하고 국제협력 확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시 우리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며, 협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되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방적인 설명이나 강요보다는 바람직한 한반도의 최종상황이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호한 평화와 안보 혹은 안전이라는 설명보다는 보다 구체성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나아가 통일외교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라. 한반도 위기방지 협력 강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상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외교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자국의 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견지할 것이며, 이는 한국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특히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

으로 이는 북한의 도발이나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보여준 주변국들의 태도는 이들 국가들이 전면전이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개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마. 국제공조체제 강화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핵 무장력을 강화한다면 대화보다는 제재에 비중을 두는 정책선택이 불가피하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발동된 유엔 안보리 1874호 대북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외교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안보리 1874호 제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

I

II

III

IV

V

VI

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핵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지역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세안지역포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3 및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의 무대에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ASEM과 비동맹회의와 같은 다자기구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계속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정책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그물망식 제재조치를 촘촘히 엮어 나가되 북한에게 핵 폐기에 따른 이득이 크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퇴로를 열어둘 필요도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한·미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지도부에 효과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가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북한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 바. 한·미동맹 강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안보위협을 받게 될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에 우위에 있으며, 경제력도 세계 11위의 강대국으로서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강해졌다. 그러나 핵무기의 파괴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있고,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군사강대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보장이 더욱 필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북한의 핵 보유에 맞서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한·미 정상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09년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확장억제전략’이라는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이 안보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이외에 괌과 일본 등지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핵억제력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에 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및 미·북간 군사대결 구조를 심화시키고 역내 군사력 강화 경쟁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sup>221</sup> 그러나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과 과거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방식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안보리차원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한·미

<sup>221</sup> 王天辰, “韓國對中國施壓恐适得其反,” <[http://www.zaobao.com/yl/tx100709\\_001.shtml](http://www.zaobao.com/yl/tx100709_001.shtml)> (검색일: 2010.7.9); 雷墨, “韓國不必對韓美同盟昇格過於興奮,”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07/954084.html>> (검색일: 2010.7.23).

I
II
III
IV
V
VI

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동아시아 역내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미국의 의지와 행동이 없이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시기의 경우와 같이, 북한 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안보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는 한·미 간 공고한 공조체제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핵 제재에 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이 핵문제를 후계체제 구축과 정권안정이라는 대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 자체로서가 아니라 북한의 미래문제와 연계해서 다뤄야만 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일각에서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재 위주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내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정권붕괴 또는 북한 체제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한·미 간 정책조율이 요구되며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 핵 제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체제변화 나아가 한반도 통일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 중국요인을 고려한 대응

북한의 핵 보유 고수정책에 직면하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동아시아 세력구도의 재편을 감안할 때, 적어도 중국의 반대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시각도 세심하게 유의하는 방향의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북한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한국이 대북정책 목표를 북한 붕괴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신시켜야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지정학적 이유로 인하여 북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방어막으로 인식하여 북한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체제가 변화되거나 북한이 잠재적 적대국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가 북한 붕괴를 기도하는 데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중국은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붕괴에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북한문제가 한·중관계를 갈등하도록 하는 가장 엄중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중국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I
II
III
IV
V
VI

둘째, 한국이 한·미동맹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중국에게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시기의 유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대중 견제역할을 하지 말기를 바랐던 것이다. 특히,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지역 및 세계무대에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이 미·중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한·미가 과도하게 동맹을 강조하는 것을 달갑게 보기 어렵다.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미래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는 정책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한국주도로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외교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게 주게 될 경우,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을 적극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국 일각에서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인들이 외국 군대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전략가들은 통일한국이 ‘중국 위협론’을 구실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정권교체 또는 북한 체제변화와 연

계해서 다루야 하는 성격을 가진 문제인 만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위협론’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한국경제가 중국의 경제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고 한국의 동맹외교정책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제기되고 서해에서 영해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등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만을 강조하고 조선족에 대한 애국의를 고취시키고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경우, 북한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기는커녕 중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3. 안보정책 측면

#### 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분석 및 평가 강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위협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우리의 입장에서 평가와 분석에 치중한 면이 있다. 또한 전술이나 전략보다는 능력에만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질적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도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즉,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6자회담

I
II
III
IV
V
VI

은 일종의 정치·외교적 상황 관리라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질적·양적 향상과 증강이 어느 수준에까지 발전할 것 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해서 판단해 볼 때 최소한 2012년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핵탄두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대책도 이러한 북한의 능력을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북한의 능력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작전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전면전을 통한 목표 달성보다는 제한적 도발에 중점을 둔다고 가정할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할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면전을 상정하되 제한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 전력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전술이나 작전 정보를 취합하는 차원을 넘어선 전략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취합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분석의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PIE(Peninsula Intelligence Estimate)를 생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능력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인 **threat-based approach**를 넘어서 **capability based approach**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즉, 북한이 어떠한 위협을 우리에게 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확충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휴먼파워를 결합한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실시간 정보공유는 물론 연합분석능력을 확충하고 합동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일본과의 정보협력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국을 통한 정보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부 근에서의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 나. 입체적·포괄적 안보전략 및 복합적 안보 협력망을 추구

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위협 변화와 증가에 따른 군사안보 대책을 강구하는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발전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제약

I
II
III
IV
V
VI

을 가하면서 주변국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적 대책만을 강구할 경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고하는데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에서 긴장과 대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 만일의 사태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적어도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전술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자 혹은 3자 간 대화의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미, 한·미·일, 필요하다면 한·미·중의 협의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의 망을 구축·확장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되며, 역외 지역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능력과 연합방위능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능력과 전략 및 전술)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자체 능력을 향상하고, 외부의 여건을 활용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동맹과 우방의 협력과 지지를 확장하여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다. 예방적 접근을 추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간다고 할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예방중심적 억제력과 억제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승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은 상대방의 정치·군사적 목표 달성을 거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정치·군사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북한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적 접근 역시 외교적 협력망과 연합방위체제의 실효성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심리적 제약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물리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정치군사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체 능력을 확충하는 방법과 동맹과 우방국들의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력을 확보하는 것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동맹과 우방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지를 판단하고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물리력의 확보를 넘어 이러한 군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과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다른 관련국들의 반응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I

II

III

IV

V

VI

예방적 접근의 핵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물리적 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조치들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것인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응전술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책은 반응적(reactive)이거나 수세적(passive)이기보다는 예방적(preventive)이고 적극적인(pro-active) 성격의 조치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예방적 조치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Plan B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도입했던 full-spectrum dominance 전략을 모방하여 우리의 전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이 가장 아파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여 이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방안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다양한 현실적 대안과 복합적 활용을 모색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all or nothing)’ 식의 전략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계별 대응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적 억제에서부터 비(非)군사적 억제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미국이 해야 할 것과 한국이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DIMEX(외교, 정보, 군사, 경제)의 틀을 이용하는 접근과

시차를 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유연억제전략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열거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나, 2012년까지의 단기대책을 위해서는 여타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북전략 타격능력 확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한국이 할 것과 미국이 할 것, 공동으로 할 것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판단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략적·전술적 소요를 산출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과 전술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 마. 한·미 안보협력의 시너지 추구

북한의 안보위협을 대처하는데서 한국의 독자적 물리적 대응능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서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비핵정책을 유지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충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다. 단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한·미 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의 방공능력과 체제는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는 것에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력획득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단기간(2012년까지) 이를 해소하는 것에는

I

II

III

IV

V

VI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요격능력(방어미사일체제)은 조 기경계와 경보의 핵심인 CAISR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 핵에 대한 자체 군사적 대책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비군사적인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북한의 정책선택을 제약하거나 선회하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안보협력력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측면은 외교 관련 서술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측면을 다룬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면서 확장억제력 제공을 약속하였고, 북한이 비확산체제 밖에 머무르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할 수 없고 나아가 핵공격의 대상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을 포함해 중요 회담시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어떻게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은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모호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전술핵의 재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offshore deterrence차원에서 재래식 억제방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재래식 전력, 핵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확장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중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것으로 파악되며, 핵무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미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한반도상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며, 대신 **offshore deterrence**를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천안함사건 이후 한미군사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규모와 장소에 대해 신중함을 기했던 것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확장억제력을 전폭적으로 미국이 제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보다는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과 대책을 중심으로 미국은 입장을 설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억제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바. 새로운 안보전략과 군사대비계획의 수립과 발전

### (1) 신(新) 안보전략 및 작전계획(OPLAN) 구상

북한의 도전과 위협이 파악되면 이를 고려한 새로운 안보전략과 전쟁계획이나 대비계획을 작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전략이나 전쟁계획에는 핵이나 미사일 위협부분이 적극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협과 도전 평가에 근거하여 새로운 안보정책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계획(전면전 혹은 제한전)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I

II

III

IV

V

VI

안보전략은 전반적인 정치·외교·경제·사회·군사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고, 전쟁계획은 이중 군사부분을 반영한 것이 될 것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다양한 위협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외교 분야가 강화되어야 하고 군사안보분야도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사회적 불안은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의 조치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해당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적 안정이 없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작전계획(OPLAN)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의 작전계획은 핵 위협분야는 소홀하게 다루어 왔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과 전술판단에 근거하여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면전을 상정할 것인지 제한전을 상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전면전보다는 제한전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전면전은 체제 안전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반대로 제한전은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선택이자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전면전을 상정한 대응책에 추가하여 제한전을 상정한 작전계획과 이러한 계획 내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어떻게 작용할 지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실질 사용보다는

사용위협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많은 경우, 우리의 대응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면전의 경우 초기에서의 우세를 장악하고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조기 제거와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핵물질의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향과 전략·전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출 가능성보다는 사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간 작계를 수정 발전시킴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한적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한전일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역할을 실제 사용보다는 위협에 무게 중심이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정치, 외교적 그리고 심리적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내용의 ‘전략적 통신(strategic communication)’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국의 독자적인 작계가 아닌 한·미 공동의 작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정 사항에 포함할 경우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작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군사적 자산을 평가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군사협력체제가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체제가 2015년 12월까지 존속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필

I
II
III
IV
V
VI

요성은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연합사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하며, 확장억제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향력이 확보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과거 1991년 전술핵이 철수될 때까지도 우리는 핵무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과거와 같은 형태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유럽에서 MLF(Multilateral Force)의 사례를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래식 전력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확장억제전력 및 전략 구체화

새로운 작전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확장억제력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구두로 제시되고 강조되어 왔던 수준을 넘어선 매우 구체적인 전술을 포함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미국측에 강조하고 호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측은 핵무기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구두약속이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억제 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대체로 억제는 대량보복을 통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 거부를 통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량보복을 통한 억제는 일차적인 공격을 받은 이후 대량보



복을 통해 적을 궤멸시킨다는 개념의 작전으로 목표물은 민간목표물(counter value)로 설정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한적인 사용을 전제로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counter force)을 통해 상대방이 추구하는 군사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거부형 억제전략을 통해 군사목표물을 파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부형 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성을 더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다양한 수단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의 수준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으로 사용 가능성을 더 높임으로서 억제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대응수단과 전략 및 전술을 확보하는 것은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도 보장할 것이다.

### (3) 예방적 연합유연억제조치(FDO) 도입 및 발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목적과 판단에 따라 평시, 위기 그리고 전쟁 시 다양한 형태의 위협 행동을 취할 것이며 우리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전쟁이전단계에서 어떠한 전력과 방안을 통해 북한을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즉,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과거 한·미 간에는 유연억제전력 혹은 신속억제전력(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s)이 존재했었으나, 최근 그 존재가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군사 이외의 수단과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I
II
III
IV
V
VI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전쟁 못지않게 전쟁이전 단계에서의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된 위협을 반영한 새로운 FDO를 준비하는 것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치·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내 안정을 위한 조치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 (4) C4ISR 및 타격 능력 확충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확충해야 한 전력은 C4ISR과 타격능력이다. 즉 ‘보고 결심하고 때리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타격능력의 확충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기 보다는 한·미 간 공유하고 보완적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C4ISR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떻게 양측의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협조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연동을 넘어선 해석과 판단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증대하고 우리의 분석 및 운용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정보 분야에서의 기계적 전문성과 분석의 정밀도는 높이기 위한 운용인력을 확충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밀타격능력부분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부분이다. hardware적 증강은 단기간에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나, software 부분에서의 능력 확충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과 목표획득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독자적으로 운용할 필요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동시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을 더욱 튼튼히 하는 정책일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치를 판단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제공을 보장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5) 방공능력 및 체제 강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후방지역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방어능력과 체제를 확충하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장거리 야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약 13,000개의 야포를 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고 이중 약 300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기간 중 미국은 이러한 야포 위협을 제거하는 대(對)화력전 임무를 한국 측에 이양하였고, 한국은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대화력전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는 의문이 있다. 대화력전 전력을 보완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력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과하여 오히려 전반적인 전력의 효율성이 감소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고려할 때, 우리의 방공체제를 현대화하고

I
II
III
IV
V
VI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로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반응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편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체제 구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경보와 대응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시레이다에서부터 저고도, 중고도 그리고 고고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중층적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동이나 연계 그 자체가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6) 사후처리능력(consequence management) 발전

방공능력을 포함한 방어능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은 역제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비한 사후처리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체적인 방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극적 방어태세(passive defense)를 확충하여 민간인과 사회·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방어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왔다. 사후처리가 미진함이 있을 경우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련부처가 협의를 강화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국가들의 지원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 왔으나,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도 낮고, 유관부처 간의 협의도 원활치 않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며, 연습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고 직면하게 될 변화된 북한의 위협에 맞게 조정하고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후처리능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 (7) 다양한 훈련 및 연습 개발과 실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련도를 제고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작전계획은 물론 다양한 도발유형을 식별하고 이러한 도발과 도전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지를 익히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습은 전면전을 상정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다. 비전면전 상황 하에서 북한이 제한적 도발과 위협을 가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식별하고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도전을 보다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넘어 새로운 틀로 북한의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보를 단순한 군사안보의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사회부분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포괄안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
II
III
IV
V
VI



## VI. 요약 및 결론





북한은 2005년 핵 보유를 선언한 이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거행했다. 아울러 북한의 여러 정책은 핵 보유를 고수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전력을 확대해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상황 진행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가 함축하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황의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새로운 도전과 과제,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적절하게 우리의 전략 구상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II장에서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 III장에서 이것이 제기하는 도전, IV장에서 미국 및 중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 핵질서의 변화, V장에서 한국의 대응을 서술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의 실태로서 핵무기 개발 경과와 현존 능력을 보자.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플루토늄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바꾸는 작업을 개시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 억제력 강화에 나선 것은 2003년 이후 중단되지 않은 미국의 핵무기에 기초한 대북 압박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축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훨씬 이전부터 추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핵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한국군의 견해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지만,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50여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1, 2차 핵 실험시 수 kg을 사용해 현재 4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I
II
III
IV
V
VI

다음은 셸리그 해리슨에 따르면, 북한 측은 플루토늄 30.8kg을 추출했고 이를 전량 무기화했다. 서방측의 일반적 견해는 (2009년 8,000개 재처리 결과(최대 약 7kg)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30kg에서 5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1개에서 12개가량의 핵 장치 또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대부분의 추론은 북한이 30~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보고, 폭탄 한 개당 5~6kg을 소요한다고 하면, 5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능력은 생산 공장 가동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농축 공장은 매년 수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2010년 초 국정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행기에 실어 투하할 수 있는 재래식 핵무기 1~2개를 개발했을 수는 있지만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앞으로 고농축 우라늄 사용 핵무기 개발 및 핵융합 반응을 활용한 강화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다각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통한 미사일 탑재 능력 개발 및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핵 보유 보수 정책의 전략적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보자.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언술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2009년 1월경부터 핵무기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현저히 강화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고수를 보다 명백히 주장하기 시작했고, 미·북관계 정상화와 비핵화의 분리, 비핵화에 앞선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효용은 실제사용 보다는 사용위협을

통해 획득된다. 북한은 언론과 방송 및 외교부의 각종 공식 발언을 통해 보유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함과 아울러 유사 시 실제로 핵이 사용될 것을 믿도록 만들기 위한 ‘의지 천명’과 ‘위협 조작’을 하고 있다. ‘침략과 공격’을 가해오는 주체는 미국과 한국으로 상정되어 있고, 또한 핵 공격과 핵에 의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009년 2차 핵 실험을 전후하여, 2006년 1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밝혔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비공격 용도로 핵무기 사용’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거치면서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은 2003년 1월부터 플루토늄을 무기화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2005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관한 모호성을 한층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 입장은 모호성에 의한 핵 억제의 측면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북한이 보다 명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요구를 제시하면서 초보적이지만, 보유 핵무기의 용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 이는 군사적 및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술적이기보다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 대상은 주요 도시나 핵심적 경제하부구조가 될 것이다. 만약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사용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무기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효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강압외교, 둘째, 전략적

I
II
III
IV
V
VI

자율성의 확보, 셋째, 권력과 위신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고수전략이 제기하는 도전은 네 가지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둘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 영향이다. 셋째, 안보측면에서 제기하는 도전이다. 넷째, 국제관계에 미치는 도전이다.

대내정치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 보유가 정권의 정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의 명령과 통제와 관련된 인물의 정치적 가치를 높인다는 점이다. 셋째,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계체제 구축이 2차 핵실험 이후 핵 보유 고수입장의 노골화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 보유에 따른 내부 경제 파장을 보면, 이익과 불이익이 있다. 이익으로는 핵기술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득, 군비지출 감소 등이 있다. 불이익으로는 막대한 핵 개발비 지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있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남·북 간에 긴장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자세가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새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 보유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과 위신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을 보다 무모하게 협박하는 또는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변국이 함부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여 한국은 부득이 선제타격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공세능력 확대로 반발할 것이

며, 일부 주변국은 자신에 대한 위협 증가로 간주할 것이다. 넷째,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 구상 조치 및 대북제재의 강화에 따라 북한의 주변국가와의 관계 및 남북 간에 경색이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의 항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적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섯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고 무기고를 개선 강화시켜 갈수록, 한국의 대북정책의 딜레마가 증가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의 질적 변화를 초래한 상황이며, 군사적 모험 가능성이 증가하여 평시에도 안보불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 사용이 아닌 사용위협(일부 모호성을 가미)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 상에서의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대남 및 대미·대일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전시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전시에 선제사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 안보불안을 심화하고, 급변사태시 주변국 개입을 촉발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전략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 핵질서에도 어려운 도전을 제기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정책의 최종 목표는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핵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 이후 미국은 약화된 대북 재래식 억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과 동·서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I
II
III
IV
V
VI

면,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후진타오 2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시행된 2006년 10월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독자적 외교노력을 적극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안정유지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일차적 관심사를 두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적으로 핵질서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 핵질서 변화의 동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 전략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핵질서 변동의 중심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차 NPT 평가회의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 포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 보유 고수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대북정책의 측면이다. 둘째, 외교정책의 측면, 셋째, 안보정책의 측면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고수는 대북정책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도전을 제기한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의 발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무용론이 등장하고 회담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핵 우산이 강화될 것이다.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이 위축될 것이다. 북·중관계가 밀착하고 한반도를 둘러

싼 신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선택으로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든지, 둘째, 북한 핵에 관한 수직적 관리와 확산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구하든지, 셋째,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속하든지, 넷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다섯째,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든지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무용론과 비관론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 다자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둘째, 북한문제와 관련한 중층적 협의·협력망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3국 공조 및 협의체의 도입과 가동이 긴급하다. 이와 병행하여 한·중·미 3국 협의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평화안보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정책이 너무 강경하고 호전적이라는 평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한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위기 방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군사적 위기가 한반도 상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섯째, 한·미동맹을 북한의 핵 보유에 맞서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핵 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있고,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

I
II
III
IV
V
VI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일곱째, 중국요인을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시각도 세심하게 유의하는 방향의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안보정책적 대응으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세워야 한다. 둘째, 입체적 포괄적 안보전략 및 복합적 안보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발전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주변국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예방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예방은 상대방의 정치·군사적 목표 달성을 거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정치·군사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북한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현실적 대안과 복합적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에서부터 비(非)군사적 억제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미국이 해야 할 것과 한국이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미 안보협력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위협을 대처하는 데서 한국의 독자적 물리적 대응능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서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안보전략과 군사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핵과 미사일 위협 부문을



감안한 새로운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확장억제전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연합유연억제조치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보고 결심하고 때리기(CAISR)’ 위한 대북 정보능력을 확충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타격능력의 보강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공 능력 강화, 사후처리능력 발전, 다양한 훈련과 연습 개발과 실시 등이 필요하다.

---

I

---

II

---

III

---

IV

---

V

---

VI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수혁. 『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 서울: 중앙Books, 2005.
-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최춘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함형필. 『김정일 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Ochmanek, David and Lowell H. Schwartz. *The Challenge of Nuclear-Armed Regional Adversaries*. Santa Monica, CA: Rand, 2008.
- Pritchard, Charles L., John H. Tilelli Jr. and Chairs Scott A. Snyde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 Watman, Kenneth and Dean Wilkening. *U.S. Regional Deterrence Strategies*. Santa Monica, CA: Rand, 1995.
- Wilkening, Dean and Kenneth Watman. *Nuclear Deterrence in an Regional Conflict*. Santa Monica, CA: Rand, 1995.

## 2. 논문

문주현.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능력.”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문흥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39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백홍중. “북한의 핵 개발능력 및 위협 평가.” 『합참』. 30호, 2007.

송화섭.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전수방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이상현. “미국 2010 핵태세검토(NPR)보고서: 내용과 함의.” 『정세와 정책』. No. 179, 세종연구소, 2010.

이춘근·김중선.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STEPI Insight』. 제2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이춘근. “북한 핵무기 및 로켓의 기술적 조명과 전망.” 세미나, 한반도 평화연구원, 2010.4.20.

황주호·문주현.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08.

Alagappa, Muthiah. “Exploring Role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Muthiah Alagappa (eds.).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_\_\_\_\_.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Security: Far-Reaching Influence and Deterrence Dominance.”

- Alagappa Muthiah (eds.).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Ann, Elliott Kimberly. "Economic Leverag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No. PB03-3, April 2003.
- Bundy, McGeorge. "Existential Deterrence and its Consequences." in MacLean Douglas (eds.). *The Security Gamble: Deterrence Dilemmas in the Nuclear Age*.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4.
- Carranza, Mario E. "An Impossible Game: Stable Nuclear Deterrence After the Indian and Pakistani Test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No. 3, Spring/Summer 1999.
- Cha, Victor D.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May 2010.
- \_\_\_\_\_.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 2002.
- \_\_\_\_\_.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heonan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3rd. KINU-USIP Washington Workshop: *After the Trip and the Ship: Assessing Prospects for ROK-U.S.: Coordination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June 2010.

- Gates, Robert. "A Balanc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28, No. 1, January/February 2009.
- George, Alexander. "Coercive Diplomacy." Art Robert J. and Waltz Kenneth N. (ed.). *The Use of Forc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4.
- Hagerty, Devin T. "The Power of Suggestion: Opaque Proliferation, Existential Deterrence, and the South Asian Nuclear Arms Competition." *Security Studies*. Vol. 2, No. 3, 1993.
-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 20, 2010.
- \_\_\_\_\_. "Denuclearizing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4, No. 2 May/June 2008.
- Hufbauer Gary, Schott Jeffrey J., Ann Elliott Kimberly and Oegg Barbara. *Economic Sanction Reconsidered*. Washing,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9.
- Hymans, Jacques E. C.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No. 2, 2008.
- IIS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2004.
-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ia Report*. No. 168, June 2009.
- Kampani, Gaurav.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No. 1, Fall 1998.
- Mansourov, Alexandre Y. "The Origins, Evolution, and Current Poli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2, No. 3, Spring/Summer, 1995.
- Nikitin, Mary Be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Report*, May 2009.
-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5, 2010.
- O'Hanlon, Michael. "Dealing with the Collapse of a Nuclear-Armed State: The Cases of North Korea and Pakistan." *The Princeton Project Papers*, September 2006.
- \_\_\_\_\_.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 September 2010.
- Reiss, Mitchell B. "Hard Containment." *The American Interest*. Vol. 5, No. 3, Winter 2010.
- Schlesinger, James.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 September 2008.
- Scobell Andrew and Sanford, John M.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pril 2007.
- Shi Yinhong. "China, the North Korea Problem and the Korean Peninsular: Protracted Predicaments with Strategic Stamina."

『2010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 국가안보전략연구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9.

Snyder, Scott. “The Cheonan Attack: Torpedoing Chance of  
Peace?” Yale Global Online, May 27, 2010.

Stares, Paul B. and Wit, Joel 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Special  
Report*. No. 42, January 2009.

Zhang Hui. “Revisit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China  
Security*. Vol. 3, No. 3, Summer 2007.

陳向陽. “透視中國的大國責任.” 『瞭望』. 第9期, 2010.

張建瑰. “現實開始爲大家上課.” 『世界知識』. 第12期, 2009.

———. “金正日訪華: 一次令人關注的外交行動.” 『世界知識』. 第11期,  
2010.

時殷弘. “非傳統安全與中美反擴散博亦.”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10.

時永明. “恢復六方會談無須先決條件.” 『北京周報』. 第6期, 2010.

肖洋·柳思思. “論有償推車戰略與中美合作.” 『現代國際關係』. 第12期,  
2009.



###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민중의 소리』.

『북핵 리포트』.

『서울경제』.

『서울신문』.

『신동아』.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쿠기뉴스』.

『통일한국』.

『한겨레』.

『YTN』.

*BBC*

*Joong Ang Ilbo*

*New York Times*

*The Associated Press*

*The Washington Foreign Press Center*

*Washington Post*

전성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그 의미와 교훈.” Online  
Series Co 10-42, 2010.1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Draft Final Document.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 2010/L.2, May 2010.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April. 2010.

Emma Chanlett-Avery/ Mi Ae Taylor.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www.chinaelections.org](http://www.chinaelections.org)>.

<[www.gov.cn](http://www.gov.cn)>.

<[www.chinaelections.org](http://www.chinaelections.org)>.

<[www.zaobao.com](http://www.zaobao.com)>.

<[military.people.com.cn](http://military.people.com.cn)>.

<[www.hndaily.com.cn](http://www.hndaily.com.cn)>.

<[www.fmprc.gov.cn](http://www.fmprc.gov.cn)>.

<[www.armscontrol.org](http://www.armscontrol.org)>.

<[www.nytimes.com](http://www.nytimes.com)>.

<[www.defencetalk.com](http://www.defencetalk.com)>.

<[www.dyn.politico.com](http://www.dyn.politico.com)>.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 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출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현준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봉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출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비매출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www.kinu.or.kr](http://www.kinu.or.kr)